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1991), 「韓半島 非核化 共同宣言」(1992), 「6.15 共同宣言」(2000)의 정신에 입각하여,

항구적이며 포괄적이고 정의로운 한반도 평화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생명, 인권, 자유, 평등, 그리고 화해를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평화의 창조, 유지, 강화의 무한한 중요성을 새기고,

남과 북의 지속적인 위협, 무력사용, 갈등을 피하기 위한 안전보장을 소망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기 위해,

1950년 6월 25일 시작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된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와 1953년 7월 27일 이후 지속된 정전상태의 완전 종결을 선언하고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의 참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남과 북은 쌍방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特殊關係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 협정은 향후 평화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함을 인정하면서,

1953年 7月 27日 체결된 「軍事停戰에 관한 協定」으로 형성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데에 다음과 같이 동의하였다.

제 1 장. 전쟁 종결과 평화의 수립

제 1조 (전쟁의 종결) 남과 북은 1950년 6월 25일 시작하여 1953년 7월 27일 停戰協定의 체결로 일시 정지되었던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의 완전 종결을 선언한다.

제 2조 (정전상태의 종식) 남과 북은 1953년 7월 27일 이후 지속된 한반도 정전상태의 완전한 종식을 선언한다.

제 3조 (평화의 수립) 이로써 남과 북 간에는 平和가 수립되었다.

제 2 장. 일반 원칙

제 4 조 (체제인정) 남과 북은 상대방의 영토, 주권, 체제,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 5 조 (내정 불간섭)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이 자기 영토 내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인정하고,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무력사용 금지) 남과 북은 무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파괴·전복·침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침략전쟁 포기 및 참여금지) 남과 북은 모든 침략전쟁을 부인하며 세계 평화유지에 노력한다. 남과 북은 또한 어떠한 침략전쟁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제 8 조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남과 북은 일체의 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 3 장. 경계선, 관할 구역 및 불가침 경계

제 9 조 (지상경계) 남과 북의 지상 경계선과 구역은 「軍事停戰에 관한

協定」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 10 조 (해상경계) 남과 북의 해상 경계선과 구역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경계선과 구역은 해상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 11 조 (공중경계) 남과 북의 공중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경계선과 관할 구역의 上空으로 한다.

제 12 조 (불가침 경계선) 남과 북은 이상의 지상, 해상, 공중 경계선을 불가침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준수한다.

제 4 장. 평화지대의 설치

제 13 조 (평화지대의 설치) 남과 북은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 (peace zone)로 전환한다. 평화지대는 최소한 1953년 7월 27일 합의된 비무장 지대의 범위 이하로 축소될 수 없다.

제 14조 (평화지대 무력 배치 및 군사훈련 금지) 남과 북은 평화지대를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경주한다. 평화지대에는 일체의 무력을 배치할 수 없으며 평화지대 내에서는 어떠한 군사훈련도 금지된다.

제 15 조 (평화지대의 관리) 한반도 평화지대의 관리는 한반도 평화관리 남북공동위원회가 담당한다.

제 5 장. 武力 不使用 및 위협 포기

제 16 조 (무력불사용과 위협금지)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위협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무력불사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무력불사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 2 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의거하여 남과 북은 이를 이행·준수한다.

제 18 조 (상호 불가침 및 무력불사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의 이행·보장) 상호 불가침 및 무력불사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의 이행·보장은 한반도 평화관리 남북 공동위원회가 담당한다.

제 6 장. 평화관리기구

제 19 조 (한반도 평화관리 남북공동위원회) 한반도에서의 분쟁해결 및 평화관리를 위해 현 군사정전위원회는 한반도 평화관리 남북공동 위원회로 대체한다. 평화관리 공동위원회는 남과 북의 대표로 구성하며 한반도 분쟁해결 및 평화관리의 제1차적 책임은 이 위원회에 있다.

제 20 조 (한반도 평화관리 국제조정위원회) 한반도에서의 분쟁해결 및 평화관리를 보조, 지원, 조정하기 위해 현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한반도 평화관리 국제조정위원회로 대체한다.

제 21 조 (한반도평화관리 국제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분쟁해결 및 평화관리와 관련하여 남과 북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일방이 한반도 평화관리 국제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관리 국제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본 평화협정에 근거하여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7 장.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및 제반 군비통제

제 22 조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비통제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 23 조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구체적 사항)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감축의 구체적 사항에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 능력의 단계적 제거, 이행의 상호 검증 문제 등이 포함된다.

제 24 조 (군비통제의 담당) 남과 북 사이의 제반 군비통제에 관한 문제는 한반도 평화관리 남북공동위원회가 담당한다. 단 동 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 남과 북은 합의하에, 또는 단독으로 한반도 평화관리 국제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 8 장. 핵 및 대량살상무기의 포기

제 25 조 (핵 및 대량살상무기의 포기)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配備, 사용, 수출을 하지 않으며, 또한 생물학무

기, 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 수출을 하지 않는다.

제 26 조 (핵 무기 포기 및 한반도 비핵화의 담당) 남과 북의 핵무기 포기 및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사항은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담당한다.

제 27 조 (대량살상무기 포기 및 통제의 담당) 대량살상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통제에 관한 사항은 '한반도 평화관리 남북 공동위원회가 담당한다.

제 28 조 (국제기구의 감시, 감독, 사찰) 남과 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포기에 관한 제반 조치들은 한반도 평화관리 국제조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유엔 또는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적절한 감시, 감독, 사찰을 받도록 한다.

제 9 장. 남북 교류·협력

제 29 조 (경제교류협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 한민족 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제 30 조 (사회문화 교류협력)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방송 및 출판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 31 조 (자유왕래와 접촉) 남과 북은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

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 32 조 (이산가족) 남과 북은 이산가족·친인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 33 조 (철도와 도로의 연결) 남과 북은 휴전선으로 인해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 34 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 35 조 (국제협력)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한다.

제 10장 전쟁과 정전상태의 종결에 따르는 전후 처리 문제

제 36조 (화해와 호양의 정신) 남과 북은 전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상호 이해와 화해, 호양의 정신에 입각,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법률적·정치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37조 (인도주의 문제) 남과 북은 전쟁과 정전상태의 기간에 발생한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38조 (전후 처리 특별위원회) 남과 북은 전쟁과 정전상태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진실과 화해, 미래지향, 통일의 정신에 입각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상호 합의하에 전후 처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9조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남과 북 주민들은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현거주지에서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침 경계선을 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제 11 장. 타 조약 및 법률과의 관계

제 40 조 (군사동맹 불가담) 남과 북은 본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되는 어떠한 조약과 군사동맹, 국제기구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제 41조 (타 조약과의 관계) 본 협정은 원칙적으로 남과 북이 각각 타국과 체결한 기존의 조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해 남과 북은 본 협정의 정신과 내용에 저촉될 수 있는 조약들을 검토, 개정하도록 노력한다.

제 42 조 (국내 법률과 규정의 개정) 남과 북은 본 협정의 정신과 내용에 저촉되는 제반 국내 법률과 규정을 본 협정의 정신에 따라 개정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개정노력은 내정불간섭의 범위 내에서 각기 주체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제 43 조 (외국군대의 주둔) 한반도 내에 외국군의 주둔은 본 협정의 정신과 목적을 구현하고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제 12 장. 협정이행과 통일을 위한 공동협의기구의 설치

제 44 조 (평화협정의 이행 보장) 남과 북은 본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 고위급협의회를 설치한다. 고위급협의회는 남북 관계의 총체적 발전을 담보할 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 경제, 예술, 체육 분야의 공동위원회를 각각 설치 운영한다.

제 45 조 (상설적 통일협의기구의 설치) 본 평화협정의 체결로 조성될 평화상태를 평화통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협의할 남북 평화통일 공동협의기구(가칭 평화통일 남북공동회의)를 설치한다.

제 13 장. 한반도 평화협정의 국제적 보장

제 46 조 (下記 署名) 이상의 평화협정 합의에 대한 남과 북의 충실한 이행을 확인하고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과 중국은 본 평화협정에 下記 署名한다.

제 47 조 (하기 서명과 당사자성) 미국과 중국의 下記 署名(postscript) 이 두 나라로 하여금 남과 북이 갖는 한반도 평화협정 당사자성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 14 장. 발효

제 48 조 (효력의 발생) 본 협정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서명하고, 그 정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49 조 (유효 기간) 본 협정은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유효

하다.

제 15 장. 기타

제 50 조 (수정·보완) 본 협정은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하여 추후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 51 조 (일방적 파기 선언) 본 협정의 내용에 관한 어느 일방의 부분, 또는 전면 파기 선언은 어떤 경우에도 유효하지 않다.

제 52 조 (문서) 본 협정은 한국어, 영어 및 중국어로 기재된 문서를 정본으로 하며, 상호 해석 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어본을 우선한다.

2003년 7월 27일

대한민국 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

署 名

署 名

하기 서명

미 합중국 대표

중화인민공화국 대표

署 名

署 名

한반도 군축과 민족공동체 건설

함택영 경남대학교 정치학

I. 서론: 세계화시대의 남북한 평화통일

우리의 평화통일 및 안보정책은 안팎으로 도전을 맞고 있다. 북한 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무력사태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북핵문제 및 주한 미군 재배치와 맞물려 한국정부는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군비증강을 계획하고 있다. '햇볕정책'이라는 남북 화해협력정책에 어느 정도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단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남북한이 체제의 대립과 불신, 증오 및 무력대치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국가는 '탈근대' 시기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제기하는 도전을 해결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¹⁾ 그러나 남북한은 아직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근대화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적대적 분단체제를 평화공존체제나 안정된 평화체제로 대체하지 못했다. 쌍방은 각기 가능하다면 군사력의 우위, 또는 최소한 균형을 통하여 국가안보를 추구해왔던 것이다. 남북한 분단과 갈등의 오랜 역사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회의주의 내지 '비관적 현실주의'를 이 땅에 심어 놓았다. 우리 사회와 학계는

1) 예컨대 Joseph S. Nye and John D. Donahue, eds. *Governance in a Globalizing World*.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0) 참조.

분단 현실의 중압감에 압도되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변증법적 조화를 기하지 못하고, 분단극복보다는 분단관리의 논의에 역점을 두어 왔다. 그 결과 평화통일정책을 단지 안보정책의 도구로 인식된 면이 있다. 또한 냉전적 안보관에 집착하는 비판적 현실주의는 또한 지나친 평화안보 및 통일정책에서 지나친 대미의존을 낳았다.

물론 안보는 평화통일 문제와 긴밀한 유기적 관계에 있다. 안보 문제의 논의에서 편협한 군사적 접근을 지양하고 자국위주의 '국가안보'가 아니라 '공동안보' 내지 '협력안보'를 모색하는 것이 탈냉전기의 시대적 요청이다.²⁾ 한편 일각에서 주장하는 '포괄적 안보' 혹은 기타 확장된 '비군사적 안보' 개념은 국가안보를 경제·자원·환경·인권 등의 영역에까지 지나치게 적용함으로써 분석적으로 유용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국가권력을 무책임하게 확장시키는 위험성마저 있다.³⁾ 그러나 국가안보에 대한 전통적인 현실주의 접근을 넘어서서 국내외 정치·경제적 요인에도 눈을 돌리는 시야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본고는 평화통일과 안보를 동시에 지향하는 '긍정적 현실주의'에 기반을 두고 남북한이 건설해야 할 평화체제는 어떠한 것이며, 가능한 수립방안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는 '소극적 평화'관을 지양하고 보다 구조적·장기적인 남북한 분단국가간의 '적극적 평화'란 '분단체제의 안정화'와 함께 민족공동체의 수립에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요컨대 남북한 평화체제는 평화협정 체결, 군비통제 및 군축은 물론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한 '공동체 수립' 양자를 포괄한다. 남북한 통합의 기본축은 경제통합과 안보공동체 수립에 있다. 특히 경제협력은 남북한 통합의 첩경이자, 그 전제조건인 긴장완화, 신뢰구축, 군비통제에 대한 간접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법임을 강조한다.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신)기능주의 통합이론 및 유럽 통합사례는 남북한과 같은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간 통합은 아니었으나, 독일통일 과정은 기능주의는 대립적인 체제간에도 적실성이 있음을 시사한다.⁴⁾ 또한 탈냉전의 국제정치를 설명함에 있어서 현실주의 이론

2) 한용섭, "평화와 군사안보,"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빛, 2002), pp. 197-231. 또한 "백종찬·이민통, 한반도 공동안보론 (서울: 일신사, 1993) 참조.

3) Mohammed Ayoob, "Defining Security: A Subaltern Realist Perspective," in Keith Krause and Michael C. Williams, eds., *Critical Security Studies* (Minneapolis: Minnesota Univ. Press, 1997), pp. 121-146.

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구성주의 시각을 원용하면, 남북한은 국가이익의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⁵⁾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 정부의 군비증강책을 군비통제·군축 및 경제협력과 연관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한반도 평화와 군축

1.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가 목표로 하는 평화란 어떠한 것인가? 현상황에서 우리는 대략 세 가지 평화의 상태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불완전한 평화'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평화의 유지'는 물론 '평화의 회복'에도 미치지 못하는 '준평화의 유지'에 불과하다.⁶⁾ 이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군사력균형을 통한 억지(deterrence) 이외에는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 수단이 별로 없다. 둘째, 부정적 혹은 '소극적 평화'는 평화의 회복, 즉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전쟁이 부재한 상태를 지칭한다. 이는 전쟁부재 상태를 회복 또는 유지한다는 개념이다. 셋째, 이에 비하여 긍정적 혹은 '적극적 평화'는 비록 전쟁은 없을지라도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이 존재하는 상태를 평화라고 볼 수는 없다는 관점에 의거한 개념이다. 즉 '적극적 평화'는 전쟁발생의 원인을 제거 내지 봉쇄한 상태를 의미한다.⁷⁾

정전협정이 유효한 '준평화'상태는 평화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한 평화체제는 적

4) 구영록, 한국과 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관계 (서울: 법문사, 2000), pp. 211-212.

5) 이근전제성, "안보론에 있어 구성주의와 현실주의의 만남," 한국과 국제정치, 17권 1호 (2001), p. 192.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96) 참조.

6) 김명기,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이론적 개관," 광태환 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p. 25.

어도 전쟁부재의 소극적 평화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통일 없이 진정한 평화란 없다. 남북한의 갈등이 민족 내부의 문제가 아닌 국가간 관계라면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고 평화공존에 합의함으로써 소극적 평화를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에서 “통일의 포기는 정권의 명분과 대중적 기반을 위협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⁸⁾ 통일이나 최소한 어떤 형태의 민족공동체 수립이 남북한 평화체제의 대전제인 것이다. 문제는 남북한 분단체제의 통일과정에서 평화와 통일은 다분히 모순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통일 없이 진정한 평화는 없지만, 평화 없이도 통일은 가능하다. 역사상 국내의 봉건지배집단 등 경쟁세력들을 복속시킴으로써 전인민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국가의 건설은 적지 않은 경우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되었다. 신라의 삼국통일, 19세기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이탈리아의 통일은 물론 베트남과 예멘의 통일에서 보듯이, ‘통일전쟁’은 그리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남북한은 통일이 진정한 한민족 평화의 길임을 알고 있지만, 각기 주장하는 ‘무력통일’과 ‘자유통일’은 너무나도 이질적이다.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은 요원한 반면 무력통일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둘째, 남북한 평화와 통일의 두번째 모순은 ‘미완의 통일’이 분단보다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력에 의한 남북한통일은 결코 신라의 삼국통일이나 고려의 후삼국통일과 같은 ‘건설적인 폭력’이 아니다. 북한의 남침이나 남한의 북진은 오히려 외세까지 개입시킨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았을 뿐이며, 또 다른 무력통일 노력은 한민족의 자멸을 가져올 것이다. 폭력을 수반하게 될 통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분단체제를 안정화함으로써 평화공존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단체제는 극단적인 강제력에 의존하지 않고는 유지되기 어려울뿐더러 이미 냉전체제의 해소와 더불어 최종 국면을 맞은 불안정한 체제이다. 더욱이 남북한의 분단은 외세에 의한 공간적 분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냉전과 맞물리면서 한민족이 근대국가의 건설과정에서 ‘계급문제의 해결’에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의미한다.⁹⁾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단상태에서는 ‘근대화 쟁

7) 송대성,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가능성, 방안 (성남: 세종연구소, 1998), pp. 6-8.

8) 백낙청,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새 발상,” 통일시론, 통권 5호 (1999), p. 117.

9) 함택영,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방안: 경제협력 및 군축을 통한 민족공동체의 모색,” 세종연

플렉스’를 극복할 수 없고 또한 남북한이 민주사회로 발전하거나 종속성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결국 우리의 의식에서는 통일 없는 한민족의 행복이 성립하기 어렵다.

분단체제의 극복은 ‘분단체제의 안정화’와 남북한 통합을 통한 ‘공동체 수립’을 요구한다. 국제정치에서 정체성(identity) 문제를 강조하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 시각에서 볼 때, 주권국가로서 정체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고 서로 이질적인 체제와 이념을 지니고 대립하는 남북한 분단구조는 화해와 평화공존의 실천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이러한 실천은 현실적으로는 소극적 평화 개념, 즉 ‘분단체제의 안정화’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상호억지에 의존하는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주변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 남북한 혹은 (남)북미 평화협정의 체결, 불가침조약 체결, 군비통제 및 군축 등을 통하여 안정화시키는 작업은 평화체제의 필수적 요건이다.

특히 1980년대 후반 탈냉전과 더불어 남한정부가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함에 따라 군축 및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군비통제 및 군축, 그리고 평화협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추상적 통일논의보다 분명히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소극적 평화 개념에 기반을 둔 ‘분단체제의 안정화’, 특히 ‘분단의 관리’에 집착하는 방안은 지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군축(disarmament) 대신 냉전적 사고에 기반을 둔 군비통제(arms control)만을 강조하는 비판적 현실주의는 극복되어야 한다. 지금도 정부당국이나 학계 일각에서 군비증강과 군비통제를 동시에 주장하는 현상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러한 이율배반은 ‘금강산 관광’과 ‘서해교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상호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측면에서 진전을 이룩한 뒤에도 우리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분단체제의 안정화’는 남북한 공동체 수립을 목표로 하는 통합과정과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한관계를 일반적인 갈등이론으로써 분석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지 모르나, 갈등관리 이론에서 볼 때도 남북한 평화체제는 ‘갈등의 예방’과 ‘갈등의 종결’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¹¹⁾ 남북한

구소 편,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성남: 세종연구소, 2001), p. 204.

10) 이근전재성, “안보론에 있어 구성주의와 현실주의의 만남,” 앞의 글, pp. 187-193.

의 (정치 혹은 안보)공동체 수립은 갈등종결 혹은 나아가 갈등해소(conflict resolution)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단 유념해야 할 것은 공동체 건설을 향한 통합 과정이 '과정으로서의 통일'임에는 이의가 없으나, 통일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남북한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 난망한 여건에서는 통일 이외의 대안적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우회적이기는 하나 보다 평화적이고 가능성 높은 평화통일의 길이다.

국가, 특히 근대국민국가 이외의 대안적인 정치공동체(political community)가 보다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또 실현 가능하다는 명제는 '해방공동체'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급진사상의 주관심사였다. 오늘날 역설적이지만 국민국가에 도전을 제기한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무제한적 확대과정인 '세계화'이다. 물론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특히 자본주의 계급사회의 통합과 재생산을 위해서는 아직 국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영토적 주권국민국가'는 오늘날 주권의 절대성에 제약을 안게 되었고, 자본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지배구조에서 부수적 지위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¹²⁾ 보다 장기적 관점을 빌어 표현하자면, 탈리가 말하는 지배권력의 양식이 '강제중심적'(현존 사회주의국가) 또는 '온건한 강제와 온건한 자본의 결합'(자본주의국가)으로부터 '자본중심적'으로 이행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¹³⁾

2.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

불안정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1) 외교적·법적으로 분단체제를 정착시키는 방안, 2) 정치·군사적으로 군비경쟁을 지양하여 배타적 안보가

11) 이석수, "분단과 대립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통일연구, 3권 1호 (1999), pp. 10-15.

12) John Holloway, "Global Capital and the National State," *Capital and Class*, Vol. 52 (Spring 1994), pp. 23-49.

13) Charles Tilly,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127-160.

아니라 공동안보를 추구하는 방안, 3) 경제적으로 상호협력을 통하여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증진하고 나아가 통합의 기초작업에 착수하는 방안이 있다. 물론 이 방안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이다.

남북한 평화체제 수립작업은 1차적으로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에 있는 분단상태를 안정화시킴으로써 평화공존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아온 것은 동맹국의 안보공약을 포함한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나 최소한 군사력균형(혹은 한미측의 군사력우위)에 의한 상호억지였다. 그러나 이 체제는 마소간 전략 핵균형과 같은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은 아닐지라도, '위협의 균형'(balance of threat)에 기반을 둔 위협하고 불안정한 것이다.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때때로 군사력균형의 불안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느편의 군비증강도 안전보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이른바 '안보 딜레마'의 '수확체감의 법칙'을 노정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특히 활발해진 것은 1992년 2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된 후 북한이 1993년부터 미국측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1996년에는 잠정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을 제안한 이후의 일이다. 남한은 한때 북한의 평화체제 제의를 '통미봉남' 전략으로 보았다. 북한의 평화체제 구상에서 가장 일관적인 것은 남한 배제보다도 주한미군 철수, 혹은 미국의 군사위협 제거에 있다. 북한이 지닌 평화개념의 본질은 전쟁의 부재보다도 美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이다. 한반도 평화안보 문제에서 미국의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종속 변수인 셈이다.¹⁴⁾ 최근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 태도에서 비롯된 한미간 대북 인식의 견해차이,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의 냉각, 그리고 남한내 보수파의 반격에서 보듯이 대북정책의 최종적 결정권은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과 마찬가지로 아직 미국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난 10여년간 미 전술핵무기의 철수와 북한의 핵개발 동결 및 미사일 실험중단 등 일련의 '사실상의 군비통제' 회담에

14) Selig H. Harrison, "Time to Leave Korea?" *Foreign Affairs*, Vol. 80, No. 2 (March/April 2001), pp. 62-63. 앞에서 소개한 '정체성 정치'를 강조하는 구성주의 이론은 권력문제, 특히 초국적 자본 군사적 패권 및 문화적 권력을 장악한 미국의 패권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당수(新)자유주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미국주도 세계질서의 정당화·합리화에 이용될 수 있다. 구성주의 이론의 정체성 개념에 대한 해설 및 비판은 홍성민, "정체성과 국제정치: 문명충돌론의 정치사회학적 이해," 국제정치논총, 42집 1호 (2002), pp. 7-28 참조.

서 주역은 미국이었다.

주한미군 문제는 평화체제를 위한 정치·군사적 방안, 즉 군비통제 및 군축과도 관련된다. 평화협정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군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한 것은 북한이었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군비경쟁 중지 및 병력감축을 계속 일관성 있게 제의해 왔다. 1987년에는 쌍방의 '단계적' 병력감축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제안했다. 1990년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은 보다 진전되어 군비통제 개념도 일부 수용하여 '북남 신뢰조성'도 포함하고 있는 바, 1) 신뢰조성, 2) 무력감축, 3) 외국무력 철수, 4) 군축과 이후의 평화보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을 불신하거나 두려워하여 군축 및 군비통제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던 남한이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게 된 것은 동서냉전의 쇠퇴 등 국제환경이 변화한 1980년대 후반의 일이다. 1988년 10월 노태우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조건 없는 군축 및 군비통제 협상·용의를 밝혔다. 남한이 표명해온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기초는 현수준의 군비동결 및 제한감축을 통해 전쟁의 우발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기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그 일차적 역점을 두는 군비통제 접근방식이다. 이는 '先 신뢰구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북한측 안과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북측이 병력감축을 강조함에 비해 (대량살상)무기의 통제 및 감축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다.

군비통제는 형식논리상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군비제한 및 군비감축)로 이루어지는 바, 군축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한국정부도 군비통제가 군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개념은 각기 독특한 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상이한 사상적 기반에서 있다.¹⁵⁾ 군축(disarmament, 혹은 arms reduction)은 전쟁의 수단인 무력을 축소 또는 철폐하여 평화를 이룬다는 20세기 전반의 이상주의적 전통에서 유래한다. 군비통제(arms control) 개념은 전후 냉전의 관리를 위한 전략적 사고를 지배한 현실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즉 군축에 비해 '최소주의적' 접근을 취하여 군사력의 구조 및 운용의 통제를 강조한다. 신뢰구축(confidence-building measures=CBMs) 역시 군비통제에서 파생한 개념이다. 즉 신뢰구축은 '운용적 군비통제'로 이해되었으나, 유럽 상호균형감축회의(MBFR)에서 신뢰구축 개념이 새로이 제기었고 1975년 헬

15) Alessandro Corradini, "Disarmament Education as a Distinct Field of Study," Marek Thee, ed., *Armament,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Paris: UNESCO, 1981), pp. 328-337.

싱키 구주안보협력회의에서 좁은 의미로 군비통제나 군축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남북한의 군비통제 및 군축에 대한 시각을 보면, 북측이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군축노선'을 택해왔던 반면, 남측의 접근방법은 현실(주의)적이지만 소극적이고 일견 수세적인 '군비통제노선'을 취해 왔다. 북측은 오랫동안 동시적·포괄적 접근에 입각하여 '先(先)군비감축, 후(後)신뢰구축' 방식을 제시해왔다. 이에 비해 남측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강조함으로써 단계적·점진적 접근을 택하여 '先신뢰구축, 後군비감축'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신뢰구축→운용적 군비통제→구조적 군비통제(혹은 정치적 신뢰구축→군사적 신뢰구축→군비감축)이라는 단계적 방안은 유럽의 재래식 무기감축협상의 사례를 참조한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고위급회담을 통하여 상대방의 논리와 용어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남북 합의서' 및 후속 합의를 이루어냈다. 또한 남북한은 전후 과도하게 팽창한 병력을 1950년대 후반에 상당한 규모로 감축했던 바도 있다(북측은 1956년 약 8만명, 남측은 1958-60년간 2차에 걸쳐 12만명).¹⁶⁾ 북한의 군축제안에는 경제적 동기도 내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 진지한 군축노력을 보여주지 않았고, 병력감축 제의도 상징적 선전공세의 성격이 짙다. 특히 1990년대의 핵개발 노력과 작년부터 최대의 평화안보 현안이 된 제2의 핵위기는 외교협상용이든 군사용이든 북한이 핵무장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남한도 군축에 대해 사실상 형식적인 명분론만을 피력해왔다. 즉 북에 대등한 군사력을 이룩한 뒤에야 진정한 군축에 임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남북한이 서로 상이한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군축정책이나 제안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군축의 반대 개념인 남북한 군비경쟁을 분석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군비경쟁의 추동력인 남북한의 위협인식, 특히 군사력균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군비통제 및 군축의 추진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공시적(共時的) 군비증강과 시간차를 두고 진행된 군비증강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경쟁적인 군비증강은 1950년대 중반과 1970-80년대에 발생했고, 또 1960년대와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군비증강계획이나 한국의

16) 함택영, "남북한 군비경쟁 및 군사력 균형의 고찰,"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2), pp. 20, 23.

초기 울곡사업은 '시소 게임'의 성격을 지녔다.¹⁷⁾ 북한은 1980년경부터 노동집약적 증강을 꾀해 왔고, 1980년대 후반에는 수십억 루블의 소련 군사차관을 빌어 공군력 및 방공능력을 현대화하고자 노력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경제위기로 인해 재래식 군비경쟁이 어려워지자 1980년대말부터 핵개발 노력이나 화학무기비축 등 보다 저렴한 대량살상무기와 로동/대포동 미사일 등 장거리운반수단 개발에 노력해왔다. 즉 북한은 '비대칭적'(asymmetric) 군비증강으로써 한반도의 군비경쟁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군비경쟁에는 남북한 군사력균형 뿐 아니라 또한 동맹관계가 큰 변수이다. 상당기간 동안 남북한의 군비증강은 대부분 군사원조에 의해 이루어졌다. 북한은 또한 남한만이 아니라 미국을 적으로 상대해 왔으며, '대포동' 미사일 개발도 일본과 미국에 대해 상징적 군사력(억지력)을 과시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최근 제2의 북핵사태에서 드러난 비밀 핵무기 개발노력도 북한 나름대로는 생존을 위한 합목적적 선택일 수 있다.¹⁸⁾

그러나 북한은 압도적으로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남한의 군비증강에 필적할 수 없었다. 북한의 군사비 규모나 군사력은 과장되어 왔다. 한국 국방부의 발표와 달리, 감가상각과 해외(미중소) 군원을 포함한 객관적 투자비누계 비교로 본 남한 군사력은 1980년대 후반부터 남한의 압도적인 우세를 보여준다.¹⁹⁾ 북한의 무기수입액은 소련의 군사원조가 절정에 달했던 1987-89년간의 20.2億弗(년평균 6.73億弗)에서 1990-99년간에는 8.3億弗(년평균 0.83億弗)로 급격히 축소되었으며, 특히 1995이후 5년간에는 년평균 0.26億弗에 불과했다. 반면 1990-99년간 남한의 무기수입액은 년평균 16.15億弗이었다.²⁰⁾ 북한은 군사력의 현대화정보화에 착수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다수의 노후화된 무기나마 효과적으로 운영유지할

17) 사실 '즉각적 반사작용'으로서의 군비경쟁은 실패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리처드슨 연립방정식은 추상적인 수리 모델로만 파악함이 타당하다.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국가역량군사력 (서울: 법문사, 1998), 제3장. 또한 Lewis F. Richardson, *Arms and Insecurity: A Mathematical Study for the Causes and Origins of War* (Chicago: Quadrangle Books, 1960); Craig Etcheson, *Arms Race Theory: Strategy and Structure of Behavior* (New York: Greenwood Press, 1989) 참조.

18) 북한 외무성은 북경 3자회의를 앞두고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물리적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핵개발의 군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동향, 640호 (2003.4.18-4.24), p. 13.

19)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앞의 책, 제5장.

수 있는 능력마저 감퇴되었다.²¹⁾

남한은 압도적인 군비투자의 우세를 통해 재래식 군비경쟁에서 승리한 결과 이미 북한에 비해 잠재적으로는 물론 전쟁수행능력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일부 공개된 "작계 5027"(OPLAN 5027) 요약을 보면 남한은 방어자의 이점은 물론 우월한 훈련, 장비유지, 병참 및 지원장비 등의 효과를 고려할 때 "압도적 우세"를 누리는 것으로 판단된다.²²⁾ 사실 남한은 근래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미래지향적 군비증강도 도모하고 있으며, 계획중인 상당수의 첨단무기는 북한의 위협보다는 향후 일본 등 주변강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것이기도 하다.²³⁾ 그러므로 오늘날 한미축의 한반도 군비경쟁에 대한 시각, 즉 군사력균형과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남한 당국은 북한이 군사력의 양적 우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전략무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및 미사일은 전쟁수행능력보다는 억지력이다. 북한은 서울을 점령할 수는 없어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대구경 '방사포'(다연장 로켓)와 170mm 자주곡사포 등 재래식 억지력도 갖고 있다. 즉 남북한간에는 남한의 재래식 '전쟁수행능력' 우위 대 북한의 '억지력'이라는 '비대칭적 군사력균형'이 이루어져 있다.²⁴⁾ 그러나 남북한간의 국력격차 및 군사비지

20) United State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1999-2000*, online at 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18740.pdf (August 8, 2003) [이하 WMEAT 1999-2000], p. 132.

21) Michael O'Hanlon, "Stopping a North Korean Invasion: Why Defending South Korea Is Easier than the Pentagon Think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2, No. 4 (1998), pp. 135-170.

22) OPLAN 5027 *Major Theater War - West: Phase 2 - ROK Defense*, online at globalsecurity.org/military/ops/oplan-5027-2.htm (March 7, 2003). 또한 Selig S. Harrison, *Korean Endgame: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2001), pp. 124-137.

23) 미국측 전문가들이 볼 때 예컨대 차기구축함(KDX)·잠수함-AWACS·전자정찰기 등 첨단장비는 주로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서,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현상황에서는 미국의 장비와 중복되는 불요불급한 것이다. *Armed Forces Journal International*, October 1998, p. 14.

24) Bruce Bennett, "Implications of Proliferation of New Weapons on Regional Security," in Tae-Hwan Kwak, ed., *The Search for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oward the 21st*

출의 격차가 커진 것을 남한측이 군사력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견해는 적절하지 못하다. 남북한간의 '비대칭적 군사력균형' 때문에 현대화 특히 '정보화'를 중심으로 하는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증강이 대북 역지의 측면에서 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 사회의 반명제(anti-thesis)인 한, 항시 남한 안보의 취약한 연결고리에 대한 위협으로 남게 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예컨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장거리포대 및 미사일의 위협은 결코 군비증강으로써 해소하기 어렵다. 선제공격을 통해 북한의 '제2적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없고, 예컨대 對포병레이다(counter-battery radar)나 탄도탄요격미사일(ABM)로 방어하는 방법도 한국의 지형이나 짧은 중심으로 인해 기술적으로도 확실한 방법이 아니다. 이러한 '위협의 균형'에 있어서 북한의 우위는 남한측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절대안보'란 있을 수 없다. '절대안보'의 추구는 달성하기도 어렵거니와 역효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²⁵⁾ 절대안보를 위한 남측의 군비증강은 북측의 군부로부터 더욱 다량의 값싼 공포무기를 갖추도록 부추기며, 또 강경책을 고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측의 안보정책은 북한의 선택적 도발을 억지하면서도 북한의 안보불안감을 자극하지 않는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 원칙을 필요로 한다. 나아가 남북한의 비대칭적 군사력균형은 신뢰구축을 통한 군비통제 및 군축 등 공동안보를 통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한측이 북한의 남침이나 전략무기의 위험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위협(인식)의 균형'에서는 열세이며,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안보문제에서 미국의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또한 최근의 북핵사태에서 보듯이, 남북한이 처한 전략적 환경에서 군축 및 군비통제가 양자간의 문제로 국한되어 처리되기는 어렵다. 강대국간의 전략적 관계의 변화는 남북한 양측이 각기 상대방의 군사력만을 대상으로 군축이나 군비통제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美 공화당 정부가 숙원인 미사일 방어(MD)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북한의 위협을 주요한 명분으로 거론하는 것,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에 대한 '선제'공격도 포함하는 '부시 독트린' 등 미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북 압박전략, 그리고 한국군에 무기판매 압력을 행사하는 실태는 미

Century (Seoul: IFES, Kyungnam University, 1977), pp. 171-204.

25) 한용섭, "평화와 군사안보," 앞의 글, pp. 214-215.

국이 한반도에서 갈등의 관리자일뿐 아니라 갈등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엄연한 사실을 보여준다.²⁶⁾

남북한 당사자간의 상호불신 자체, 상이한 통일정책과 군비통제/군축관, 그리고 주한미군을 포함한 동북아의 독특한 지정학적 요소와 안보환경(예컨대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부재) 등이 한반도 군축의 실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에 처한 북한의 '강성대국' 및 '선군정치' 노선이 또 다른 도전으로 제기되었다. 오늘날 군사력은 북한에게 유일한 존립기반이자 가장 유력한 정책수단이며, 군의 정치적 지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한과의 (재래식) 군축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황에서 군비감축이야말로 가장 유력한 신뢰구축조치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남측이 강조하는 신뢰구축과 북측이 강조하는 군축은 단계적인 선후의 문제나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남측의 일견 논리적이며 현실성 있는 군비통제방안, 특히 신뢰구축은 북한이 그러한 협상에 참여하기 전에는 실현시킬 방도가 없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이 어려운 이상 정치적 신뢰구축이 요망된다. 남북한 군축문제는 남북한관계의 핵심을 차지하는 사항이며, 사실 정치적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다행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신뢰구축은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진전될 수 있다. 사실 정상회담과 이후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한 남북의 군인사교류와 비무장지대의 철도연결 공사 등 비록 낮은 단계이기는 하나 군사적 신뢰구축도 이루어낸 바 있다.

그러나 철도사업이 시사하듯이 현재의 남북관계를 볼 때 일정한 정치적 신뢰구축 이상의 정치·군사적 해결을 기대하기란 매우 힘들다. 사실 근본적인 적대관계에 있는 남북한간에 '인지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조치만으로 근본적인 신뢰구축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 경우 평화공존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경

26) United States,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September 2002, online at usinfo.state.gov/topical/pol/terror/secstrat.htm (May 12, 2003). 부시 행정부는 선제공격이 항시 미 외교·군사정책의 도구였다고 강조하나, 쿠바 위기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강조했던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미국은 먼저 공격받기 전에는 개진한 바가 없다. 부시 행정부의 '선제' 전쟁 개념은 보다 공격적인 '예방' 전쟁으로도 해석된다. David E. Sanger, "Beating Them to the Prewar," *New York Times*, September 28, 2002, p. A17.

제협력이라는 간접적 접근방법이다. 요컨대 남한은 '先신뢰구축後경제협력'이나 '先신뢰구축後군비감축' 같은 철저한 상호주의 조건을 고집하지 말고 양자를 공시적으로 진전시켜야 한다. 동서독관계가 보여주듯이, 경제협력이야말로 남한측이 구사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신뢰구축 방안이기 때문이다.²⁷⁾ 사실 남북 정상들도 6·15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²⁸⁾

III. 경제통합과 민족공동체²⁹⁾

이상에서 경제협력은 간접적이지만 효과적인 군비통제를 위한 신뢰구축의 방안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경제협력은 적극적 평화체제, 즉 남북한의 안보공동체 수립에 결정적인 관건이 된다. 세계화시대에 보다 평화적인 민족공동체 수립의 첩경은 경제통합에 있는 것이다.

국가간 통합의 형태는 수준에 따라 1) '다원적 안보공동체'(pluralistic security complex), 2) 공동시장, 3) 국가연합, 4) 단일 국민국가(연방제 포함)로의 통일 등 4단계로 준별할 수 있다. 국제통합의 과정은 반드시 이러한 수준들을 순차적 단계로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맹과 같은 다원적 안보공동체와 공동시장은 공동체수립을 위한 각기 대안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국가간통합'의 사례를 보면 제1, 2단계만으로도 평화나 공존공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제3단계이상의 통합수준이 요구

27)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외교정책의 현실과 이상 (서울: 법문사, 2000), pp. 291-292.

28) 통일부, 2001 통일백서, pp. 453-454.

29) 이 절의 내용은 본 연구자의 기발표 논문을 축약발전시킨 것이다. 함택영, "남북한 통합 과정 모델 비교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16권 1호 (2000), pp. 161-198.

된다. 남북한의 진정한 민족공동체는 적어도 '최소한의 정치공동체', 즉 단일 국민 국가가 아닐지라도 상당수준의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을 전제로 한 국가연합 또는 그 이상의 통합을 최소요건으로 한다. 현재까지 남북한이 제기해온 통일방안들을 보더라도 최소한 국가연합 이상의 통합수준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영어로 'confederation'으로 표기하지만 그 내용은 국가연합이 아니라 연방이다). 국가연합의 예를 보더라도 영연방, 통일이랍공화국, 소련 몰락 이후의 독립국가연합(CIS)은 과도기적이고 분리주의적인 통합형태도 있다.

남북한 통합의 단계는 논리적으로 제1단계(복합적 안보공동체) 혹은 제2단계(공동시장)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남한측이 강조해 온 경제협력 및 교류를 통한 경제사회적 통합을 우선시하는 접근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분단대립체제라는 역사적 현실을 직시할 때, 제1단계와 제2단계는 단계적순차적(sequential)인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은 공시적(synchronic)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어떻게 제3단계로 나아갈 것인가에 있다. 남북한의 적대적인 대립구도에서 어떻게 '공동의 대외안보위협'에 기반을 두는 복합적 안보공동체, 혹은 최소한 화해협력단계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통합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합의 방식, 특히 향후 남북한 사회의 변화와 통합과정의 대안은 <표 1>에서 보듯이 1)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여부, 2) 남한 및 미국의 정책(강경책 대 온건책) 및 남북한관계라는 상호 연관되어 있는 양대 변수를 중심으로 한 2×2 도식으로 전망할 수 있다.³⁰⁾

표 1. 남북한 통합의 대안

	북한 개혁개방	북한 체제고수붕괴
남북관계 긴장 (한미 강경책)	경쟁체제를 통한 분단체제 지속(I)	무력통일 혹은 내전(III)
남북관계 호전 (한미 온건책)	공동시장을 통한 국가연합(II)	흡수통일(IV)

30) 함택영, "남북한 통합과정 모델 비교분석," 앞의 글; 구종서 외, 남북한 통일 시나리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6) 참조.

분단체제 지속(대안 I)은 중단기적으로는 가장 개연성이 높다. 이는 마중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측이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는 가운데 북한이 부분적으로 '중국식 개혁개방'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또 이 대안은 중국의 대규모 경제원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 전망은 이념대립이나 지정학적 이유로 동북아에 마중 신냉전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보다 바람직한 모델은 대안 공동시장 방안(대안 II)이다. 즉 북한이 개방화세력의 주도하에 개혁개방에 착수할 뿐 아니라 한미측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중국과 일본도 지역의 안정을 위하여 대북지원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공동시장의 실현이 비교적 용이할 뿐 아니라, 이른바 '통일비용'도 장기간에 걸쳐 분할 부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안 III-IV는 북한이 현체제를 고수하나 내부모순의 중첩으로 인하여 와해되는 모델이다. 북한의 현체제는 체제붕괴가 국가붕괴로 이어질 개연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소련방의 몰락이 국가붕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또 엘리트 구조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오늘날 '강성대국'과 '선군정치'라는 북한의 현실을 볼 때,³¹⁾ 만약 북한에 당지배체제가 붕괴될 때 나타날 잠정적 대체정권은 동독의 '드메지에르 정권'과 같은 민간정부가 아니라 폴란드의 '야루젤스키 정권'과 유사한 군부통치일 것이다.

대안 III은 이러한 상황하의 '경착륙' 시나리오다. 이때 남북한 어느 쪽이 도발하던간에 결국은 남한측에 의한 무력통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대안 IV는 흔히 독일식의 흡수통일 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한미측과 중국의 온건책 및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경제재건에 실패하고 그 결과 체제붕괴는 물론 국가의 붕괴로까지 이어진다는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북한체제 및 남북한관계는 독일의 사례와 매우 다르다. 북한의 현지도층이나 후속정권은 물론 대다수 인민들의 대남 적대감 때문에, 북한이 동독과 같이 비교적 유혈사태 없이 흡수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비교한 통합과정의 모델들 가운데 보다 개연성이 높은 것은 전망 I 및 II임을 알 수 있다. 남한의 시각에서 바람직한 통합형태나 통일비용 측면을 고려하면 우선순위가 전망 II>IV>I>III이 된다. 통일비용에서 군사비 같은 분담비용을 공

31) 북한은 1998년 8월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의 발사에 즈음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선언했다. 노동신문, 1998년 8월 22일; 1999년 1월 1일. 선군정치에 대한 해설은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참조.

제한 '순(net)통일비용'을 고려할 때 조기 흡수통일이 '분단관리/경제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합'보다는 경제적이란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IV>II>I>III).³²⁾ 북한으로서는 전망 I>II>III>IV의 순서가 될 것이나, 일부 강경파들은 I>III>II>IV의 우선순위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측으로서는 경경책보다 온건책이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이 되며(II>I 및 IV>III), 북한측으로서는 개혁개방이 붕괴에 비해 우월전략이다(I>III 및 II>IV).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혼란인명피해투자의 비효율 등을 고려할 때 대안 II 즉 '공동시장을 통한 국가연합'만이 거의 유일한 합리적 선택의 대안으로 남게 된다. 다시 말해서 고전적인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통합과 정치통합을 연계하는 '신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통합방안이다. 즉 남북한은 경제협력을 통한 '확산효과'(spill-over)와 '점진적 정치화'를 통하여 국가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³³⁾

물론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각국이 절대적 득실보다는 향후 상대방과의 힘의 관계를 고려한 '상대적 득실'에 관심을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⁴⁾ 북한은 개혁개방의 결과로 체제가 와해되고 결국 흡수통일에 이르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 북한지도층은 개혁개방과 체제고수 사이의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것이다. 사실 '공동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제통합이란 불가피하게 남북한간의 불평등한 수직적 분업구조에 기반을 둘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체제붕괴로 이어져 더욱 조기의 흡수통일을 낳을 수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점진적 흡수통일'과 붕괴로 인한 '조기 흡수통일' 가운데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셈

32) 민족통일연구원, 분담비용과 통일비용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참조. 그러나 군사비가 통일이후에도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분담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3) Ernst B. Haas and Philippe C. Schmitter, "Economics and Differential Patterns of Political Integration: Projections about Unity in Latin America," *International Organization*, Autumn 1964, pp. 705-737.

34) Joseph M. Grieco,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1988), pp. 485-507.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시장에 참여하는 것만이 북한이 국가로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된다. 북한이 오늘의 경제난과 체제위기에 이르게 된 일차적 책임은 이러한 북한판 일국사회주의(‘우리식 사회주의’) 때문이었다. 그리고 개혁개방 없이, 특히 ‘개혁 없는 부분적 개방’은 한계가 명백하다. 경제개방은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물론 북한의 개혁은 소련식의 정치개혁선행이 아니라 중국베트남과 같은 경제개혁 우선이 정치경제 양면에서 유리하고, 또 북한의 부분적인 개방조치를 보더라도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남한측으로서도 공동시장을 향한 경제협력 전략이 가장 유망하다. 식량원조 같은 동포애에 입각한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오늘날 남한의 경제구조가 지닌 ‘생산물주기’(product cycle)의 특성상 노동집약적 소비재산업 및 중저급기술의 생산재산업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은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남한의 대북 자본수출은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거시적 경제협력정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정부는 KEDO 방식에 활용하여 국제기관 및 미·중일 등과 협력하는 가칭 ‘한반도농업개발기구’(KADO)·‘한반도산업개발기구’(KIDO)를 통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거나 민간의 투자를 유도보장할 수 있다. 북한이 국제기구를 보다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국제협력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북한측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공동시장이 수립된다고 해서 국가연합으로의 진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 단계에서 남북한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다원적 안보공동체’를 결성하는 일이다. 다원적 안보공동체의 수립에는 ‘가치의 양립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³⁵⁾ 경제협력의 상호의존성 증대를 통해 남북한의 경제적 공영이 쌍방의 주요 정책목표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또한 경제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을 군비통제 및 군축으로 진전시킴으로써 ‘공동안보’ 체제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뢰구축과 경제협력은 순차적이 아니라 공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간의 교역·투자·기술협력 등을 협의·규제·조정하는 정부간기구 및 민간기구(NGO)들이 안보공동체수립의 제도적 초석이 될 수 있는

35) 구영록, 인간과 전쟁: 국제정치이론의 체계 (서울: 법문사, 1977), pp. 351-352.

것이다. 또한 남측이 적극적인 경제지원과 경제협력을 통하여 북측의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군수산업의 민수화(民需化)와 이에 따른 탈(脫)군사화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군축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³⁶⁾

요컨대 세계화·정보화시대에 현실성 및 당위성의 차원에서 가장 기대되는 남북한 민족공동체 수립방안은 공동시장을 통한 경제공동체·사회문화공동체·정치공동체의 단계를 거친 (신)기능주의적·시민사회중심적인 통합전략이다. 무리하게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다시 한번 비극적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통합은 ‘내부 식민지화’로 인하여 민족통합에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국가중심적’ 접근에 비하여 공동시장 방안은 ‘경제협력→경제공동체(공동시장)→다원적 안보공동체→국가연합→통일’이라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이지만, 남북한 각자나 한민족 전체로 볼 때 보다 합리적인 시나리오이다. 비유컨대 이는 북한이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으로는 중국식, 정치·군사적으로는 소련식 전환을 이루는 방안이며, 평화적인 ‘수렴 통일’, 굳이 말하자면 ‘먼 훗날의 흡수통일’을 기약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중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자면, 중국과 홍콩의 ‘일국양제’ 통합보다는 ‘양국일제’ 단계를 거친 ‘일국일제’ 통합이 될 것이다.

‘경제통합을 통한 민족공동체’ 수립전략은 남북한의 협력, 즉 남한의 대북 온건책(경제지원 및 군비통제)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요구한다. 특히 가까운 시일내의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의 전망에 있어서는 북한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북한이 자신의 존재를 전세계와 특히 한·미·일에 알리는 가장 유력한 수단은 군사적 위협이다. 핵개발 의혹을 십분 활용한 조미회담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난 바 있지만,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대외정책을 통해 국가의 안보를 보장받을 뿐 아니라 남한과 해외로부터 경제원조를 획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군사력만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끌어내지 못한다. 대신 북한은 해외원조 및 투자를 얻기 위해 대미·대일수교를 중시하였으며, 또한 남북 정상회담에 응하였다.

북한이 스스로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에는 대외관계, 즉 한·미·중의 정책과 중국의 대미 및 대한반도정책이 관건이 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개혁개방 여부에는 한·미·중의 대북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군부를 포함한 북한의 지배 엘리트들 다수로 하여금 공동시장을 통한 국가연합(전망 II)이 무력통일(전망 III)보다

36) 황진환,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한 군비통제정책: 포괄적·간접적 군비통제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36집 3호 (1997), pp. 496-498.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한미측의 호의적인 대북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미중은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개혁개방 지원책을 구사하되, 북한으로 하여금 평화비용의 지불을 강요하는 '공갈외교'를 지양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향후 남북한관계를 관리한다는 장기적인 안목과 억제·신뢰구축경제협력 면에서 통합적·연계를 지닌 정책이 요구된다. 사실 향후의 6자회담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 및 명백한 검증을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 및 기타 국가들의 보증(및 이에 따르는 경제원조)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이고도 결정적인 해결을 목표로 한다.

IV. 남북한 평화구축 정책방향

평화와 통일, 즉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이 염원하는 지상의 과제이다. 국민국가의 지위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세계화라는 세계사의 새 조류에서 남북한의 '기능주의적 통합'의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다. 또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통합'이 정치·군사적 통일, 즉 '위로부터의 통합'에 비해 바람직하다. 물론 이러한 공동체는 결속수준이 약한 경제공동체(혹은 공동시장)에 머물기 때문에 공동체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는 못한다. '시장'을 '공동체'로 승화시키는 데에는 민족과 같은 '규범공동체'의 상징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평화안보정책은 통일정책과 분리될 수 없다. 남북한의 군사대립과 군비경쟁은 군사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보다 대승적인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남북한의 독자적인 안보정책은 비생산적인 적대와 군비경쟁을 낳을 뿐, 결국 각자의 안보를 보다 증진시키지도 못했다. 요컨대 두 분단국은 각자의 근시안적인 국가이익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남북의 공동이익, 즉 '민족이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적 억지력에 기반을 둔 안보위주의 '소극적 자세'로부터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안보' 내지 '협력안보' 그리고 나아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남북한의 공동안보는 최소한 불가침조약 등 평화협정과 군비통제 및 군축을 바탕으로 한다. 첫째, 남북한은 그 이름이야 어떠하든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의 불안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4자회담이나 향후의 6자회담 혹은 기타 방식을 통하여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을 완료하고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레짐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것이다. 또한 동북아의 평화는 또한 경제협력에 달려 있기에 남북한 경제의 번영이 미국은 물론 일·중과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 없다.

둘째, 남북한의 상호 인정은 군비통제 및 군축과 밀접히 연관된다. 상대방의 존재로 인한 안보위협은 피차 감내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받아들이고, 이른바 '절대안보'에 대한 집착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남북한은 상호 무력도발을 억지하면서도 상대방의 안보불안감을 자극하지 않는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 원칙을 필요로 한다. 남북한은 나아가 동북아의 군비통제 및 군축을 지향함으로써 다자간안보체제의 수립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안보정책은 4강과 군비경쟁을 전개하는 것이 역부족일 뿐 아니라 위험한 전략이라는 뼈아픈 자각에서 나와야 한다.³⁷⁾ 앞으로 북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에서 남북한의 자주적이고도 주도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청된다.

셋째, 적극적인 평화체제를 목표로 하는 세계화시대의 바람직한 평화통일전략은 정치·군사적 접근보다 경제적인 접근에 의하여, 즉 경제통합을 통하여 민족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는 길이다. 범세계적 자본(global capital)의 지배가 관철되는 세계화시대에 남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시장의 논리'와 '(민족)공동체의 논리'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는 길이다. 즉 상호의존성 증대를 통해 경제적 공영이 쌍방의 주요 정책목표로 정착되고, 또한 경제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이 군비통제 및 군축을 촉진함으로써 안보공동체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바람직한 한국정부의 대미정책 기조는 무엇인가? 먼저 대미 일변도의 안보협력관계를 재고함으로써 통일조국의 독자적이고도 평화지향적인 정책과 철학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민과 정부 모두의 심리적·정책적 대미의

37) 함택영,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방안" 앞의 글, p. 222. 동북아 각국의 향후 국력 및 군사력 추세에 대한 전망은 Charles Wolf et al., *Log-Term Economic and Military Trends 1994-2015: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 (Santa Monica: RAND, 1995) 참조.

존을 극복하여 군사협력관계에서 '보조적 역할'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체제, 특히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연합사령부 구성 및 운영, 무기개발 및 구매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올 것이다. 특히 남한은 주한미군 문제를 전향적으로 '미군이 없는 한국의 안보'를 구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평시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책능력의 배양과 자주적 안보의식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대북정책에서는 장기적 안목을 지니고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끈기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의 '정경분리' 원칙이 국내정치 목적을 위하여 희생된다면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북한의 개혁이나 민주화를 조급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유신시절의 한미관계와 북한의 대중대소관계를 볼 때, 우방의 요구가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여져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사례가 많았다. 남북한이 각기 가장 신뢰하고 의지해온 동맹국과의 관계가 이렇진대, 상호불신과 대립관계에 있는 남북한간의 내정간섭은 금물이다. 또한 당분간 군사력의 시위가 북측의 유일한 카드라면 군축을 강요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상호군축이 당분간 어려운 여건이라면 적어도 한미측만이라도 '합리적 충분성' 원칙에 의거하여 '자발적·일방적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하는 '비대칭적 상호주의'도 고려해 볼만하다.

한편 북한은 무엇보다 먼저 핵개발을 중지해야 할 뿐 아니라, 지난 가을 핵위기에래 급격히 실추된 대외적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다. 북한의 핵개발 노력 그 자체는 심각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할지라도, 비핵화조약(NPT) 탈퇴 조치와 핵무기 보유 유무에 대한 모험주의적이고 일관성 없는 공식·비공식 발표와 각종 행태는 국제적 신뢰를 잃기에 충분하였다.

V. 토론: 군비경쟁 및 2004년 국방예산 요구안 비판

북핵문제로부터 제기된 안보위기 및 불안감은 남한의 군비증강으로써 해결되는 성

격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의 문제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한국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은 북핵사태와 주한미군 재배치와 맞물려 군비증강책으로 변질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 국내여론은 보다 동등한 한미동맹을 요구하지만, 한편으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만 나오면 불안해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친미, 반미를 떠나 국민들의 대미 안보의존 심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주국방이 절실하다고 수차례 걸쳐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은 최근 주한미군을 대북 억지력에서 동북아시아 신속대응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응하는 군비증강을 요구했다. 7월에는 미군기지 이전 및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떠맡게 될 구체적인 임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막대한 국방예산 지출을 요구한다. 국내외로부터 제기된 자주국방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방부는 6월 11일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서 현재 GDP 2.7-2.8%의 국방비를 3.2%로 대폭 늘리고, 특히 내년도 전력투자비는 금년에 비해 무려 42% 증액 계상된 것이다.³⁸⁾ IMF위기와 대북 포용정책 때문에 다소 자제했던 차세대유도무기(SAMX), 조기경보관제기(EX), 공중급유기, K1A1 전차 등 '숙원사업'들이 망라되어 있다.

국방부는 나아가 향후 국방비를 세계 평균인 GDP 3.5%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방부는 GDP 3% 이상의 국방비를 최대목표로 삼아왔다. 선심성 공약일 수밖에 없는 노무현, 이회창 후보의 대선공약도 고작 "GDP 3% 이상"이었음에 비추어보면 (권영길 후보는 대폭적인 감군과 국방비 감축을 공약했음), GDP 3.2-3.5% 국방예산 요구안은 놀라운 진전인 셈이다. 북핵위기와 한미 동맹체제의 갈등, 미국의 주둔군 재배치 결정 및 한국군의 전력증강 요구, 그리고 노 대통령의 자주국방 공약 등이 획기적인 국방비 증액 요구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국방비 증액의 문제점 증액 그 자체가 아니라 근거와 논리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첫째, 먼저 국방비 총액의 규모를 볼 때 우리의 군비부담이 세계평균인 GDP 3.5%를 반드시 목표로 해야 하는가는 의문이다. 물론 우리는 안보위협이 높은 국가이지만, 국방비는 가상적국의 능력과 위협, 국방 소요제기 및 우리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것이니 남들을 무조건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현

38) 한국일보, 2003년 6월 12일.

재 한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살펴볼 때, 군비부담 및 이에 따른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향후 경제적으로도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둘째, 군비부담의 세계평균이 GDP 3.5%라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국방부는 2001년 기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자료만 인용하고, 같은 해 세계 평균 군비부담이 2.6%라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통계는 소개하지 않았다.³⁹⁾ 또한 세계 각국의 공개된 군비 및 무기이전에 관한 미 국무부의 2002년도 보고서를 보면 1999년 세계평균은 2.4%였다.⁴⁰⁾ 이러한 통계의 차이는 국방비와 GDP 측정의 차이보다는 극히 단순한 계산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즉 미 국무부와 SIPRI는 보다 의미있는 가중평균, 즉 세계의 국방비 총계를 GDP 총계로 나눈 평균치를 사용함에 비해, IISS는 각국 군비부담의 단순평균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IISS의 2000년도 보고서는 두 가지 지표를 함께 사용했던 바, 1999년 단순평균은 4.1%임에 비해 가중평균은 미 국무부와 같은 2.4%이다.⁴¹⁾ 군사적 갈등이나 각종 안보위협이 많은 빈국들에 비해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부국들의 군비부담이 낮기 때문에 이런 통계상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여하튼 국방부의 3.5% 설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셋째, 국방비를 늘려 미제 신예무기를 많이 사들인다고 자주국방이 이룩될지는 의문이다. 자주국방을 표방한 지 거의 30년, 그러나 대미의존 심리는 여전하지 않은가? 전시 작전통제권, 독자적인 정책 및 전략, 전력구조, 한국형 무기체계 및 장차 주한미군 없는 한미동맹에 대한 경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군의 인적 자질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전시작전통제권 및 부단한 교육훈련·교류 및 기획 및 공동작전을 통해 군사 및 전략적 사고를 통해 한국민의 대미 안보의존 심리를 재창조하는 미국의 해계모니가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수립에서 작전운용, 무기체계 선정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의존하는 한 자주국방은 요원하다.

39)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2-2003* (London; Oxford Univ. Press, 2002), Table 26, p. 6;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02: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Oxford Univ. Press, 2002), p.231.

40) WMEAT 1999-2000, online at 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18739.pdf (August 8, 2003), pp. 22, 51.

41) *The Military Balance 2000-2001*, Table 38, p. 6.

넷째, 대폭 증액된 국방비, 특히 전력투자비(구입비 및 연구개발비)의 구성비를 살펴볼 때에 비현실적이다. 군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증액을 배려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목표로 한 42%라는 대폭적인 투자비 증액이 가능할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최근 한미간 합의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모든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바, 그 규모는 최소한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⁴²⁾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수년간 분할한다 하더라도, 투자비는 재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양적 증강, 즉 '외연적' 투자에 더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무형전력인 인적·조직적 역량에 대한 투자, 즉 부대 및 장비의 운영유지비(O&M)와 투자비의 균형 잡힌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끊임없는 교육·훈련을 통해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군은 항상 운영유지비가 인건비나 투자비보다 많다. 우리도 즉 군사기술혁신(RMA)과 아울러 '국방경영혁신'과 '인사관리혁신'이 절실하다. 군은 첨단기술군을 약속해 왔지만, 지상군과 해공군의 균형 잡힌 소수 정예의 전력구조 양성에는 미흡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정부 및 민간 보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군은 지상군 위주의 대병력을 구조조정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다. 그 결과 최근 국방비 가운데 병력유지비(2000년경부터 별도 항목으로 분류된 "급식·피복" 비용 포함)가 사실상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으로 후진적인 예산구조를 보이고 있다.⁴³⁾ 최근 국방부는 207년까지 병력을 4% 감축할 것을 밝힌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⁴⁴⁾ 앞으로 보다 과감한 병력감축 노력을 기대한다. 또한 미 2사단의 대체전력을 크게 증강해야 한다고 하나, 후방 기동군단의 예하 기계화사단을 보강하여 미 2사단을 임무 교대할 수는 없을까?

다섯째,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에 있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첨단전력의 선별적 육성이 바람직한 것이다. 미 당국자들도 인정하다시피, 한국군의 재래식 전쟁수행능력은 인민군에 비해 월등하다.⁴⁵⁾ 미국측이 주한 지상군 재배치에 나선 것은 이러

42)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이전비용을 연간 10億弗(1조원)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총 150億弗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2003년 7월 29일, A4.

43) 2003년 국방예산은 인건비 43.5%, 급식·피복비에 7.3%로서 합계 50.8%였다. online at www.mnd.go.kr/mnd/sub_home/html/sub_home8_index.html (August 8, 2003).

44) 한국일보, 2003년 8월 6일, A9.

한 군사력균형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의 전력증강, 즉 장비구입은 시급하지 않다. 통일국군에 대비하는 긴 안목으로 은인자중하며, 미래의 전력증강을 기하는 연구개발(R&D)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RMA의 핵심인 정보기술(IT)의 강점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군 공동의 R&D 사업도 유망할 것이다.

국방부가 제시한 일부 대규모 전력투자 계획은 사업의 적실성이 적다. 장비를 보더라도, 예컨대 K-1A1 전차는 북/남 주력전차의 비율(약 1.5 대 1), 한반도 지형상 전차전력이 지니는 한계, 인민군의 노후화된 전력(1950년대 기술의 T-54/55 및 1960년대의 T-62)을 볼 때 불요불급한 사업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판 미사일방어(MD) 논쟁일 것이다.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도입하는 SAM-X 사업은 사실상의 (MD를 의미한다. 그러나 마일 외에 MD계획을 가진 나라는 별로 없다. PAC-3는 미사일 요격능력이 입증되지 못했고, 우리 지리적 여건에서 효용성이 낮으며, 너무 고가이다. 또 주변국과의 마찰과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더욱이 초강대국 미국도 장거리(나이키)와 중거리(호크) 대공미사일을 패트리엇 단일체제로 교체했다. 사정이 이렇진대 하물며 한국이 나이키를 패트리엇으로, 호크는 한국형 중거리대공미사일(KMSAM)로 각각 교체하겠다면 과욕이다. 한편 이미 제2차 차세대전투기(FX)로 선정된 F-15K 도입에서도 나타나듯이, 무기 도입방법에 있어서도 한국형 무기개발이나 공동생산이 아니라 미제무기 직구입 방식으로 선회함으로써 자주국방의 또 다른 주요 목표 하나가 퇴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 군산복합체의 부당한 압력이 있다면 단호히 맞서야 할 것이다. 한미 군사 관료주의나 군산복합체에 나라의 국방정책을 내맡길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군비증강은 또한 그 동안 이룩한 일정 수준의 남북 신뢰구축에 역행하여 다시 군비경쟁을 심화하게 된다. 북은 남과 첨단군비경쟁을 벌일 힘은 없지만 나름대로 남측의 약점을 위협하는 비대칭전력을 배양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막대한 군비투자를 한 뒤에도 확고한 안전보장을 누리지 못하는 '안보 딜레마'에 봉착한다. 우리 국방정책은 평화통일정책과 분리될 수 없다. 남북한은 또한 동북아 동북아의 군비통제 및 군축을 지향해야 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장

45) "OPLAN 5027 Major Theater War - West: Phase 2 - ROK Defense," op. cit. 또한 CSIS, *Conventional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CSIS Working Group Report, August 2002 참조.

차 통일한국의 안보정책은 4강과 군비경쟁을 전개하는 것이 역부족일 뿐 아니라 위험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국제안보협력과 '합리적 방어충분성'에 의거한 한반도 공동안보가 요청된다. 국민적 합의하에 우리 실정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군비투자를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국방비 증액이나 첨단무기가 곧 자주국방은 아니다. 자주국방의 기본은 자주의식에 있다.

8. 24.

I 21세기 대안인식의 모색과 평화담론 Part 1 I

I. 국가, 시장, 평화

국익, 안보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 권혁범

민중의 자치와 평화 / 김종철

II. 민족, 민족주의, 평화

평화운동과 민족주의 / 정현백

통일문제와 평화 / 이태호

I 특별서선 I

북한인권과 동북아평화-시민사회의 역할 / 이성훈

I 21세기 대안인식의 모색과 평화담론 Part 2 I

III. 문화, 교육, 평화

차이인정을 통한 평화문화 / 유지나

교사들의 평화교육 만들기 / 이장원

평화심정의 사회화와 평화문화 형성 / 김철수

IV. 젠더, 군사주의, 평화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안보개념의 해체와 재구성 / 황영주

군사주의 문화와 남성/여성상 / 권인숙

민중의 자치와 평화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영남대 교수

“이른바 ‘개발의 시대’ 동안에 ‘민중의 평화’는 사라졌다. 발전이라는 외피 밑에서 세계 전역을 통하여 민중의 평화를 깨뜨리는 전쟁이 계속되어온 것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민중의 평화는 사실상 사라져버렸다. 나는 경제개발에 대한--풀뿌리에서 시작하는--제약이 민중이 자기의 평화를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믿는다.“-----이반 일리치

부안 앞 바다 위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지금 부안에서는 거의 전쟁상태를 방불케 하는 흉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오랫동안 핵폐기장 부지 선정에 고심해오던 정부가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당초 위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부안 군수의 유치신청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위도 주민들의 동의라는 게 거액의 현금보상을 미끼로 한 거의 속임수 수준의 책략에 의한 것임이 드러나고, 그 결과 이제 와서 국책사업에 관련하여 현금보상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위도 주민들 사이에서도 핵폐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만약 위도에 핵폐기장이 들어서면 자신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어업과 관광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 때문에 맹렬히 반대투쟁을 전개해온 부안의 다수 물 사람들과 이제는 같은 입장에 서게 된 게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말하는 위도 주민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지금 핵폐기장이 들어설 위도와 그 주변의 부안군 사람들이 환경운동가들과 더불어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핵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관료와 “전문가”들은 그러한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계속하여 주장해오고 있지만, 극히 간단한 상식의 눈으로 보더라도, 정말 위험이 없다면 어째서 구미 여러 국가들이 원자력발전을 중단하거나 적어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지, 또 원자력산업이 계속되는 나라에서 어째서 핵폐기물 처리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주 구호처럼 외는 말, 즉 그렇게 안전하다면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부근이나 혹은 서울의 강남지역에 설치하면 될 게 아니냐 하는 주장은, 결코 밀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단순히 무식한 발언으로 치부될 수는 없는,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논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뛰어난 과학기술력과 관리 능력으로--이것은 현실적으로 물론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방사능 방출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핵폐기물에 들어있는 다양한 방사성 물질들, 특히 그 중에서도 반감기가 무려 2만년 이상 걸리는 플루토늄과 같은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의 존재를 고려한다면, 핵 안전 시설과 그 관리는 이미 과학기술이나 인력관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역사상 어떤 국가, 어떤 정부가 만년 이상 지속된 예가 있는가. 국가가 망하고, 정부가 소멸되었는데도 방사능으로부터 사람과 생명을 지키고자 홀로 불침번을 서는 과학기술자, 경영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나는 오늘날 극히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위험한 기술을 가지고 문명된 생활을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잘못은 근본적으로 자기들의 전문영역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전문가연”하는 태도를 취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원자력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산업체나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들을 교육하고 계몽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계몽되어야 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지, 풀뿌리 민중이 아니다. 이번에 위도의 주민들이 처음에 핵폐기장이 자신들의 마을에 들어서는 것을 용인하기로 한 것은 방사능의 안전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안전에 위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에

도 불구하고, 워낙 고달픈 생활이 좀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특히 현금보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거액의 돈을 거머쥐게 된다면 빚도 갚고, 어디론가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나름대로의 이기적인 계산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나무랄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들 그러지 않겠는가.

문제는 돈만 있다면, 지금까지 오랜 세월 뿌리를 박고 살아온 생존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가능하고, 때로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어느새 시골의 풀뿌리 공동체에까지 깊이 침투해 있는 현실이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무런 새로운 현상도, 놀랄 만한 현실도 아니다. 이러한 현실은 지난 30여년에 걸쳐 이 사회를 압도해온 경제성장과 개발의 논리가 가져다 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가 놀라워하는 급속도의 경제성장과 개발 덕분에 이 사회가 과거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유통, 소비하는 사회로 전환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풀뿌리 민중의 삶이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마도 주류 경제학의 입장에서 볼 때, 민중의 삶은 전반적인 향상을 기록해 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소위 경제개발이 본격화하기 시작하던 60년대 후반의 사정에 비추어보건대, 지금 한국인들의 생활수준은 적어도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상품생산과 소비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진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러한 “진보”가 너무도 끔찍한 대가를 지불해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른바 경제발전을 통한 사회적 진보라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인간적 비극과 사회적 모순의 누적적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또 무엇보다, 생태적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대재앙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개발을 제창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아무리 그럴 듯하다 하더라도, 이제 그 방향으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아직도 한국사회는 환경보다는 경제성장이 더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이 실제로 적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의 경제활동--생산과 소비와 폐기의 수준--은 생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훨씬 넘어 서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도 부유한 선진국의 환경이 질적으로 우수

한 현실을 감안하면, 환경문제를 생각하더라도 먼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는, 아직도 흔히 들리는 주장은 오늘날 소위 선진국의 부가 비서구 지역에 대한 식민주의, 제국주의적 착취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모른 척 함으로써 가능한 주장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선진국 수준의 경제생활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회에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중대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만일 오늘날의 선진국의 중산층 혹은 후진국의 지배층이 누리는 생활패턴이 전 세계적으로 되려면, 지구가 서너개 더 있어도 모자란다는 것은 엄연한 과학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먼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제적인 위상이나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는, 그 애국주의적 열정은 가상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보다 경제적인 발전이 늦은 집단, 사회, 지역을 착취하는 것밖에 안되는 극히 비윤리적인 사고의 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낡은 부국강병의 논리가 계속 허용, 확대되는 분위기에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아닌 모든 생명들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평화의 문제를 생각하는 자리에서, 좀더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오늘날 평화, 무엇보다도 민중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특히 민중의 평화를 운위하는 것은 평화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 결코 빠뜨려서는 안될 차원을 주목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풀뿌리 민중의 일상생활 자체가 전쟁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민중의 평화라는 개념이 중요한 또다른 이유는, 지금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집단과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군사적 충돌이나, 침략이 본질적으로는 지배자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지 결코 민중과 민중 사이의 대결일 수는 없다는 가장 근본적이며 흔히 간과되고 있는 사실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민국가라는 틀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근본적 가능성과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지는 얘기가 아니고, 또 실제 전쟁상황에서 일차적으로 희생되는 병사들이 국가의 이름으로 동원된다는 사실을 외면하지는 얘기도 아니다. 문제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장래에도 그럴 수밖에 없지만, 풀뿌리 민중을 동원하지 않고는 전쟁이 성립되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전쟁은 어디까지나 풀뿌리 민중과는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없는 지배자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이반 일리치는 일본방문 중에 행한 기념할 만한 강연 <평화의 근원적 의미를 생각한다>(1980)에서, 평화라는 개념은 지역, 문화,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면서, 지배자들의 관심이 늘 “^{Peacekeeping} 평화 유지”에 있어왔다면, 풀뿌리 민중은 언제나 “평화로운 내버려두어져 있기를” 염원하면서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중이 이해하는 평화와 지배층이 생각하는 평화는 그 내포가 전혀 다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민중의 삶에 있어서 평화가 갖는 의미가 국가나 지배자들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땅에 뿌리박고 사는 풀뿌리 민중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루 하루의 생존이며, 가족과 이웃들과 어울려 삶의 기쁨을 향유하면서, 서로 돕고 보살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여 가는 생활이다. 그들에게는 지배와 정복과 영토확장과 같은 “전쟁의 동기”를 잉태하는 욕망이 있을 수 없다. 정복인간(homo conquistador)은 본래 풀뿌리 민중의 심성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멘탈리티에 뿌리를 두고 있음이 확실하다. 지난 수십년간 알프스 계곡의 한 작은 마을에서 살아온 영국작가 존 버저의 관찰처럼, 민중생활이 근본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생존의 순환적인 지속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의 개인적, 집단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땅의 보존과 오랫동안 땅을 돌보아온 공동체의 지혜, 이웃들과의 협동적 관계와 상부상조, 보살핌과 환대, 고통을 견디는 기술, 그리고 자립적 생존을 위한 토대 중의 토대인 이러한 여러 공동자산(common)이 훼손 없이 보존되는 것이다. 이반 일리치에 의하면, 유럽에서 적어도 중세까지 민중생활의 토대로서 “공유지(common)”는 지배자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전쟁상황 가운데서도 거의 훼손 없이 보존되어왔다. 밭을 갈고, 밀을 수확하는 농민의 생활이 붕괴되면 전쟁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왕들과 제후들이 전쟁을 벌여도, 이렇게 “공유지”가 보존되어 있는 한, 민중생활은 대체로 평화로이 유지될 수 있었고, 전쟁은 “다른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이었을 뿐이다. 민중에게는 땅이 보존되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한, 자급, 자치의 근본적으로 평화로운 삶이 가능했고, 국가와 교회의 존재는 그들의 삶에서 부차적, 외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중세 말기부터 “공유지”는 파괴되기 시작한다. 공유지의 사유화를 본격적으로 강제한 이른바 엔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파괴

되기 시작한 것은 자기 땅이 없는 가난한 농민들의 생존수단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자율적인 삶의 방식 그 자체였다. 그리고, 유럽에서 공유지가 광범위하게 붕괴되어 가는 시기는 자본주의의 발흥뿐만 아니라 정확히 근대적 국민국가의 출현 및 그 확대과정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말할 것도 없이, 그 시기는 콜럼버스 이후의 서구제국의 해외팽창, 나아가서 제국주의적 세계 지배가 본격화하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문명은 안에서의 억압과, 바깥으로의 정복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류학자 스탠리 다이어먼드의 유명한 말이지만, 콜럼버스 이후 500년 동안 서구제국이 온 세계의 토착민중 사회를 정복, 유린해 오는 과정에서 그 명분이 언제나 “문명개화”였다는 것은, 적어도 유럽에 있어서 “문명”의 역사와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료하게 전해준다. 그것은 반드시 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언제나 유럽사회 안팎의 풀뿌리 민중의 삶의 기반을 망가뜨리는 과정으로 점철되어온 것이다. 오늘날 온 세계를 소수의 특권적 부유층과 대다수의 소외된 빈곤층으로 양극화하는 과정을 갈수록 심화, 확대시키고 있는 이른바 “세계화”는 단순히 냉전체제 이후의 미국에 의한 패권주의적 세계지배를 위한 새로운 틀, 새로운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다. 500년 전 콜럼버스가 카리브해의 작은 평화로운 섬 타이노에 도착하여, 콜럼버스 자신이 감탄할 정도로, 춤과 노래와 높은 수준의 공예문화를 향유하면서 “거의 낙원 속에 살고 있는” 순진무구한 토착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무자비한 살육을 감행했을 때, 이미 “세계화”는 시작되었던 것이다. (인디언 혹은 인디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본래 지극히 평화로운 낙원 속에서 살고 있는 토착민들을 가리켜 스페인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이다. 즉, 스페인어로 “하느님의 품속에서”라는 말 “en Dios”에서 유래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지난 500년 동안 계속되어온 서구 문명의 비서구 지역과 민중에 대한 침략, 약탈의 역사를 세세하게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서구 문화권에 대한 서양의 침략은 언제나 자기 사회 내부에서의 밑바닥 공동체에 대한 가차없는 억압과 파괴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서구의 내부이든 외부이든, 침략은 어디에서든 민중생활의 토대, 즉 자급 문화(subsistence)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유럽인들과의 느닷없는 첫 대면에 노출됨으로써 거의 전면적인 붕괴, 사멸을 강요당한 아메리카의 토착민 문화는 극단적인 경우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한 그러한 공격은 바로 서양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내재한 메커니즘의 필연적인 산물이었고, 그런 한에서 토착 아메리카인들의 운명은 서양세계 내부의 기층민을 포함한 세계 도처의 토착민들과 풀뿌리 민중이 겪게 되는 비극적 재난을 예고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말할 것도 없이, 금년 봄은 세계의 양심의 소리를 간단히 무시하고, 또 전통적인 동맹국들로부터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자행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도 이러한 일관된 공격의 역사에 있어서 최신의 사례를 나타낼 뿐이다.

그러나, 공격이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으로 표현될 필요는 없다. 아마도 민중의 자급, 자치, 자율적인 생존의 지속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노골적인 군사적 공격 못지 않게 혹은 좀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더욱 위협적인 것은 이른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생존의 토대의 파괴일 것이다. 실제, “개발”이라는 것은 1949년 1월에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미국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4개항에 관한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다. 향후 미국과 같은 “발전된” 선진국의 첫째 임무는 미개발 내지 저개발된 국가나 지역들에 대한 지원과 원조여야 한다는 트루먼의 새로운 대외 정책 노선에 대한 공식적 천명은 결국 좀더 세련된 형태의 식민주의적 지배를 계속하겠다는 발언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에서 갓 풀려난 소위 신생 독립국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개발”은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저개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되었다. 그리하여 근대적 학교와 대학들이 들어서고, 종합병원이 세워지고, 관료조직이 강화되고, 도로와 항만과 공항이 건설되고, 자동차가 들어오고, 텔레비전이 들어오고, 거대한 댐들이 강을 막기 시작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고, 산업단지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농지가 축소, 오염되고, 갯벌이 사라지고, 바다가 오염되고, 농촌공동체가 붕괴되고, 도시가 비대화하고, 슬럼이 확장되고, 범죄가 증가하고, “빈곤의 현대화”가 만연하게 되었다.

허다한 제3세계 정치지도자들이 대개 맹목적인 개발론자들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 현대사의 비극의 한 큰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는 더러 “개발”의 이러한 귀결에 대하여 솔직히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독립 후 인도를 이끌어온 네루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생애의 마지막에 인도사회를 서구사회 못지 않은 산업사회로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민중의 처지는 갈수록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달아온 부정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자신이 산업화를 경계하라고 했던 간디의 가르침을 경시한 게 큰 실수였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4년 작고 직전, 네루는 이렇게 말했다. (William Fisher ed.,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1993) 참조.)

“요즈음 나는 갈수록 간디의 방식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근대적 산업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이고, 최선의 기계와 최고의 효율을 가진 기술을 선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오늘의 형편을 볼 때, 아무리 빠르게 우리가 산업시대를 향해 진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은 이러한 진보의 영향을 입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실일 것입니다. 매우 오랫동안 근대적 발전은 그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좀더 다른 생산방식을 찾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론 그들의 도구는 근대적 기술에 비해 열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계획을 세워서,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개선하도록 분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나는 이 문제로 끊임없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식민주의-개발-세계화가 결국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적 지배가 심화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단계별 개념들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단계를 통해서 풀뿌리 민중의 삶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려왔다는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회적 사실이다. 가령 오늘날 거대한 댐들과 원자력 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풍부한 기술인력을 자랑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 “풍요”는 극히 일부 계층에 국한된 현상일 뿐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독립 이전 식민지 시대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문제는 인도의 경우가 결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금 금융권력과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세계화”는 낭비가 구조화된 미국식 생활방식을 세계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지역 생태계에 뿌리박고 살아온 세계의 수많은 지역공

동체들을 와해시키고, 인간생존의 자연적 토대를 파괴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추세로 사회적, 생태적 상황이 계속된다면, “세계화”의 미래는 커녕 인류가 이 지구상에 단순히 살아남는다는 것도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곧 다가올지도 모른다.

“개발”이든 “세계화”든 언제나 근대화, 진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왔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근대주의, 근대성이라는 것은 세계 도처의 토착 민중사회에게는 견딜 수 없는 재앙, 문자 그대로 홀로코스트였다. 그러나, 서구의 침략 앞에서 비서구 지역의 엘리트와 지식인들은 일반적으로 국민국가 체제를 시급히 정비하여, 과학기술과 군사력을 양성함으로써 서양문명을 따라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다급한 욕구를 느끼고, 표현하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가령 동북아시아의 바다에 “흑선(黑船)” 혹은 “양이선(洋夷船)”이 나타난 19세기 중엽 이래 지금까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그 대표적인 것은 일본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과 그 이데올로그들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경우이다. 후쿠자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메이지 시대의 대표적인 “자유민권사상”의 제창자로서, 또 게이오(慶應) 대학을 설립하기도 한 교육사상가이자 실천가로서 지금까지도 일본사회에서 널리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는 또한 구한말의 조선의 개화세력을 배후에서 도와, 갑신정변에서 실패하여 일본으로 피신했던 김옥균을 보호하고 있던 인물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어느모로 보나 그는 그 무렵 동아시아 사회에서 “진취적” 사상과 운동 경향을 대변하고 있던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당시의 세계상황을 문명과 미개와 야만이 공존하는 세계로 파악하고, 아직 “미개” 사회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일본의 국가적 과제는 무엇보다도 서양제국이 보여주고 있는 “문명”의 수준을 하루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진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보기에, 일본은 당시의 조선이나 지나(支那)가 “야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비해서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사회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서양에 비해서는 분명히 낙후된 사회였다. 그리하여, 그가 제창한 것이 유명한 “탈아입구(脫亞入歐)”론, 즉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주장이었다. 아마도 약간 세련된 형태로 변모했을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시아의 소위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탈아시아”의 욕구는 후쿠자와 유키치에 있어서는 탈농(脫農), 즉 자급, 자족적 농업 중심 사회를 벗어나 팽창적, 공격적 공업중심 사회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러한 후쿠자와 류의 멘탈리티가 메이지 시대 이후 계속해서 일본 지배층의 사고의 주류를 이루면서, 조선과 대만의 식민지화, 중국침략, 태평양전쟁,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의 비극... 종전 후의 경제부흥, 미나마다의 비극을 위시한 환경재난, 식량자급률 25%, 평화헌법 체제의 약화와 우경화 추세 등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재앙으로 귀결되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농업중심 사회로는 “문명된”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는 후쿠자와 식의 사고방식은 사실상 지난 100년 동안,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적어도 동아시아 사회의 엘리트들 전체를 지배해온 사고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실제로 메이지 시대에도 서양 강대국의 모범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비교적 작은 나라들의 선례에 따라, 군사적, 경제적으로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대신에, 인민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체제로 발전하는 것이 일본의 장래로서 바람직하다는 견해, 즉 소일본주의(小日本主義)를 제창한 지식인들이 소수지만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다나카 아키라(田中彰), <小日本主義--日本の近代를 다시 읽는다>(1999)참조.) 이러한 견해는 시대의 대세에 밀려 파묻혀버렸지만, 오늘날 부국강병의 논리와 농업중심 체제로는 실제로 아무런 희망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게 된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돋보이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소일본주의”라는 아이디어에는 기본적으로 인간불평등 사상과 그에 기초한 “주인이 아니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해묵은 침략과 지배와 전쟁의 논리를 거부하고,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웃들과 공존공생하는 삶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후쿠자와라는 인물이 “자유민권” 사상의 제창자로서 흔히 기억되고 있다고는 하나, 그의 그 “자유민권” 사상의 배후에는 아시아의 이웃나라들을 야만시하는 강한 경멸감이 들어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조선과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지지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일본 개화기의 후쿠자와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사상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편파적인 인간관, 사회관 위에 서있던 것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후쿠자와의 자유주의 사상이 기실 뿌리깊은 인간불평등 사상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비단 대외적인 관계에서만 아니라, 자기 사회 내부의 하층민을 보는 그의 시각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가 소위 명문 사학(私學)의 설립자라는 것은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가 국립대학의 설립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이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후쿠자와가 국립대학 설립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국립대학이란 국가의 비용으로 인재를 기르는 교육기관인데, 그러한 국립기관으로서 가난한 가정출신인 머리가 좋은 수재[貧智者]들의 입학은 가로막을 수는 없고, 이러한 청년들이 대학교육을 받으면 대개 사회주의자가 되어 국가 체제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에 의하면, 새로운 국제화된 세계에서 어차피 교육도 경쟁원리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상품이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듯이 교육이라는 상품도 각 가정의 능력에 따라 구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후쿠자와의 “탈아론”과 교육관에 대해서는 역사학자 야스카와 슈노스케(安川壽之輔)의 <福澤諭吉의 아시아 認識>(2000, 高文研)을 주로 참조하였다.)

최근에 작고한 일본의 역사학자 이에나가 사부로(家永 二郎)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군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교과서에서 진실되게 기록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오랫동안 계속했던 양심적인 학자이다. 그는 그의 저서 <태평양전쟁>(1986)에서 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했던 후쿠자와 식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만약 후쿠자와가 서양제국주의의 침략에 직면하여 일본이 아시아의 이웃나라들에 대한 침략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나라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추구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옳은 말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풀뿌리 민중에 대한 계급적 편견이 이토록 뿌리깊었던 “사상가”에게서 어디까지나 겸허한 마음과 철저한 평등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시아적 연대의 사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후쿠자와의 경우가 하나의 전형으로서 보여주듯이, 서양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서서 대응하려는 노력 역시 대부분의 경우 서양을 따라잡으려는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그 결과 어디서나 부국강병론이 활개를 치고, 농업포기 공업우선의 사회로의 재편이 일반화된 게 현대사의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재편 과정에서 민중의 삶은 뿌리로부터 흔들리고, 민중의 삶에서 평화는 점점 가망 없는 목표가 되어왔다는 것도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근대성 내지 근대주의의 역사적, 사회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새겨두어야 할 기본적인 사실의 하나는 설령 근대 자본주의 국민국가 체제의 발전에 의해서, 그리고 그 체제와 결합된 근대적 과학기술에 의해서, 인류사회가 근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많은 이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따져보면 늘 인류

전체 가운데서 극히 소수에게만 국한될 수밖에 없는 혜택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계속 간과한다면, 우리는 흔히 근대적 가치와 논리의 근원적인 극복이 아니라 부분적인 개조를 통해서 당연한 위기적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오래된 지적, 도덕적 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아마도 이런 맥락에서도 간디의 사상과 실천은 세계사적 중요성을 갖는지도 모른다. 하루빨리 서양문명을 따라 잡는 것이 시대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했던 후쿠자와의 경우가, 따져보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전 세계의 소위 엘리트들의 일반화된 사고방식이라면, 이미 20세기 초에 서양문명의 본질적 모순과 한계를 명확히 간파하고, 그 문명이 절대로 일반화될 수 없는 것임을 꿰뚫어봄으로써, 서구 산업주의 문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활방식을 제시했던 간디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간디의 이러한 예외성은 날이 갈수록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일부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공존공생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간디가 제시한 길은 부국강병의 논리가 활개를 침으로써 대다수 민중은 늘 소외와 억압과 빈곤을 강요당해온 현대사 전체의 상황에서 진실로 획기적인,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 창조적인 발상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간디의 <힌두 스와라지>(1909)는 그가 아직 남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이던 때에 쓴 소책자이지만, 이 책은 생애 마지막까지 간디가 견지하였던 문명관과 사회경제사상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기념할 만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간디 자신 이 책의 중요성을 되풀이하여 언급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1921년에 간디는 “그것은 1909년에 썼어졌지만, 지금 나는 그 책에서 아무것도 취소하고 싶지 않다. 그 책자는 ‘근대’ 문명에 대한 심각한 공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는 인도가 ‘근대문명’을 배격한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이득만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또 1945년에는 어떤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힌두 스와라지>에서 내가 기술했던 것을 지금도 완전히 지지한다. 그 후의 내 경험은 1909년에 내가 썼던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비록 내가 그것을 믿는 유일한 사람으로 남는다 하더라도 나는 유감이 없다.....나는 만약 인도가, 그리고 세계가, 진정한 자유에 도달하려면, 조만간 우리들이 마을, 궁전이 아니라 오두막으로 가서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우리들은 마을생활의 단순소박성에서만 진리와 비폭력의 비전을 가질 수 있

다.....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요지는 각자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들의 삶의 운영방식을 결정할 힘을 갖고 있는 마을 자치(스와라지)를 의미했다. <힌두 스와라지>를 통하여 간디가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농촌 마을 중심의 자치, 자급, 자립적 민주주의야말로 인도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생활방식으로서 영구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만인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간디의 시각에서 볼 때, 서구식 산업문명의 근간에는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라는 구조를 합법화하는 인간불평등 사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논리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것은 널리 인류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고, 장기적인 지속이 가능하지도 않은 자원약탈과 낭비를 내재적인 원리로 하는 경제 체제 위에 구축되어 있는 문명이었다. 예를 들어, 독립후의 인도가 무엇보다도 산업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네루는 자본주의의 악이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보았지만, 간디는 “산업화 자체에 악이 내재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은 결코 ”사회화“를 통해서 근절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간디의 사상은 식민주의에 대한 투쟁 가운데서 정립되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식민주의에 대한 이해가 갖는 독특함과 예리함이다. 예를 들어, 레닌을 위시한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흔히 제국주의 혹은 식민주의의 본질을 자본주의의 문제로 파악해왔다고 한다면, 간디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식민주의를 서구 산업문명 그 자체, 즉 “근대성”의 불가결한 구성요건으로서 이해했던 것이다. 식민주의는 흔히 피식민지 주민들에게 “근대적”인 가치와 제도와 문물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 측면이 없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식민주의에 의한 시혜는 어디까지나 좀더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 침략과 약탈을 위해 포장된 명분일 뿐이지, 결코 식민주의 그 자체에 내재한 논리일 수는 없는 것이다. 식민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상업적 이익을 위한 팽창, 지배하려는 권력의지와 “영광”에 대한 탐욕이다.

이러한 식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 근대문명은, 간디의 시각에서 볼 때, 철저히 폭력에 근거한 문명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진정한 문명이 아니었다. 간디에게 있어서, 참다운 문명이란 윤리적, 종교적, 영성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의 삶에 이르게 하는 “행동양식”이었다. 야만이란 그러한 행동양식의 결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몽사상 혹은 좀더 정확히는 산업혁명을 통해 정립된 서구 근대문명의 주된 “행동양식”은 사회적 강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자들의 운명이 철저히 유린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인간의 물질적 욕망과 정치적 야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연을 마음대로 소유, 착취해도 된다고 보는, 자연과 인간을 철저히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는 인식론적 혁명을 동반했다. 이것은 서구세계의 전통과도 근본적으로 단절되는 경험이었으며, 그 결과 철저히 세속화되어 가는 서구 근대문명의 세계에서 정치의 주된 목적이 이제부터는 오로지 경제적 번영을 위한 욕망 충족에 있다는 생각이 뿌리깊이 자리잡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종교는 한갓 미신으로 치부되거나, 아니면 그 사회적, 심리학적 쓸모 때문에 평가될 뿐이었다. 또한, 산업주의 문명은 노동의 개념도 변화시켰다. 노동은 더 이상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는 창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단순히 이윤과 자본, 권력을 생산하는 능력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육체노동은 교육받지 못한 하층민에게 적합한 것으로 비쳐지기 시작하고, 또 기술의 혁명적 발달과 더불어, 종래 어디까지나 주체인 인간을 돕는 도구였던 기계는 이제부터는 그 자체의 내적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자율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인간이 도리어 기계의 하인이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근대적 정치사상은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적 체도를 제창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산업국가들에 해당되는 체도와 가치였지, 인도를 포함한 비서구 사회들에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산업화되지 못한, 즉 “문명개화”되지 못한 사회를 위해서 서구 근대 부르조아 정치사상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였다. 최선의 양심적 자유주의를 대표했다고 평가받아온 존 스튜어트 밀도 이러한 “문명”과 “비문명”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세계를 가르치는 방식에 동의하였고, 그 결과, 후쿠자와가 자신의 자유민권 사상과 제국주의적 침략의 논리 사이에 별로 갈등을 느끼지 않았던 것처럼, 밀도 자신의 자유주의 사상으로써 인도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양심적 자유주의자조차 끝내 제국주의적 멘탈리티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서구적 근대성에 내재한 근원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지 모른다. 흔히 우리는 제국주의적 지배와 정복의 논리와는 별도로 서구의 근대성이 갖고 있는 역사적 진보성과 보편적 가치는 따로 평

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들어왔다. 예를 들어, 인권 혹은 시민적 권리의 개념, 법치주의,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 의한 제도적 복지체제, 여성해방의 논리, 근대적 교육제도, 경제적 번영의 가능성, 종교적 관용을 포함한 관용의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대적 과학과 기술의 혜택 등등--이러한 것은 서구와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비서구 지역 어디에서도 “보편적”인 것으로 적용될 수 있고, 또 마땅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믿음은 특히 제3세계의 교육받은 지식인들 사이에 뿌리깊이 퍼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근대적 가치와 체도의 원활한 수용과 운용을 가로막는 자본주의적 경제시스템에 의한 사회적 불균형이며,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을 어떻게 시정하느냐 하는 것이 유일한 문제라고 그들은 흔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에게 근대성 그 자체는 의심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이자 “진보”의 불가결한 계기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의심할 수 없는” 진보적 가치들이 오랜 인류사의 경험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또 세계 도처의 토착 공동체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실은 극히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매우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인권이나 법치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지금 치아파스의 사파티스타 농민운동과도 연계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하여 강력한 풀뿌리 저항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멕시코의 노(老) 지식인 구스타보 에스테바는 젊은 시절 한때 정부에서 일하고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이지만, 지난 수십년 동안 멕시코 남부 농촌지역에서 토착민들과 함께 생활을 같이 하며 살아왔다. 그는 자신을 일컬어 “전문가 버릇을 떨쳐버린”(deprofessionalized) 지식인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현대적 지식인으로서 거의 예외적이라 할 만큼 철저하게 풀뿌리 민중 공동체의 입장에서 오늘의 문명세계를 보고 있는 그가 쓴 비교적 최근의 책 <풀뿌리 포스트모더니즘>(1998)은 모더니즘의 진정한 극복은 엘리트 지식인들의 현란한 지적 언어유희를 통해서가 아니라 세계의 밑바닥 민중 공동체에 의한 자립, 자치적 삶의 방식의 유지, 회복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핵심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씌어져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풀뿌리 민중 자신의 삶이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들의 삶을 그동안 짓밟고 유린해온 가장 근본적인 폭력, 즉 근대적 기획들의 극복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나온다. 실제로, 에스테바는 그 자신 오랜 세월 멕시코의 도시 변두리와 궁벽한 농촌에서 겪었던 풍부한 체험을 근거로, 이러한 풀뿌리 공동체 어디서나 발견되는 “서로 어울려 사는 삶”(conviviality)이라는 공동체적 생활방식

이야말로 비단 변두리로 밀려난 소외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예증 가운데, 인권이나 법치라는 서구적 개념과는 달리 멕시코의 토착민 사회가 오랫동안 어떻게 자신의 독특한 관습을 보존해왔는지에 대한 에스테바의 설명은 주목할 만하다. 에스테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서구식으로 하자면 범인을 체포하여 기소, 재판을 거쳐 징벌을 가하는 것이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정당한 방식이겠지만, 토착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며칠동안 그가 흥분상태에서 진정될 때까지 어떤 방에 가두어놓거나 어디에 붙들어매어 놓거나 한 뒤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한다. 마을에서 추방하자, 외딴 곳에 격리시키자, 등등 여러 의견이 나오지만, 대개는 그가 외롭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를 받아들여 우리가 돌보면서 지켜주자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범죄행위를 죄를 저지른 사람의 전체적 상황에서 따로 분리해내어 그것을 개별적으로 묻고, 징벌을 가하는 방식, 즉 근대적 인권 내지는 법치주의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원리에 토대를 둔 사고방식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정의의 실현과 공정한 질서를 중시하는 근대적 개인주의 문화에 길들여진 감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철저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시하는 “보살핌의 문화”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보살핌의 문화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토대, 즉 살아있는 공동체의 존재이다.

서구 근대문명이 발전시켜온 인권 내지는 법치주의 원리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인간적으로 더 탁월한 원리가 토착 전통사회에서는 이미 오랜 예전부터 뿌리박고 있었으며, 그것은 근원적으로 공동체적 삶의 방식에 기인해왔다는 사실을 좀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른바 “관용”(tolerance)이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서구 근대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떠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며, 따라서 철저히 서구적 토양에서 배태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것은 종교적 신념이나, 인종이나, 계급이나, 민족에 따른 차이, 즉 이방인이나 낯선 사람들의 “타자성”을 인정하고, 허용한다는 뜻이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관용”이라는 것은 결국 세련된 혹은 “문명화된” 형태의 “불관용”일 뿐이다. “관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배 그룹이 인정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진 존재이지만, “문명화되어” 있는 지배그룹 혹은 주류 문화의 너그러움 때문에 그 존재가 허용되는 게 가능하다는, 그러한 수준의 “관용”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선의 경우에 약자에 대한 강자의 아량이나 선심의 표현에 지나지 않으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포기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철저히 서구 부르조아 문화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관용”의 개념에 비해 근대 이전의 서구 전통사회나 오늘날의 토착 공동체의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환대”(hospitality)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환대”는 상대의 존재에 대해 아무런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타자를 받아들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자의 처지에 보상을 바라지 않고 반응하는, 풀뿌리 공동체의 오래된 생활관습이다. 이것은 철저히 평등주의적인 인간관,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집을 떠나 여행중에 있는 “과객”에게 무상으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거의 상식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식적 관습은 세계 각처의 토착사회 어디서든 존재하는 기본적인 관습이었다. 풀뿌리 공동체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궁핍한 물질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흔들림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환대”의 관습 때문이었다.

나카무라 테쓰(中村哲)는 일본 후쿠오카 출신의 의사로서,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변경 지역 촌락에서 주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구호 사업을 전개해 온 사람이다. 그의 책 <우물을 파는 의사>(2001)에는 젊은 시절 등산을 좋아하여, 중앙아시아의 험준한 산들을 오르고 내리는 경험 끝에 그가 어떻게 해서 결국 아프가니스탄의 궁벽한 시골에서 의료활동을 하면서 장기 체류를 하게 되었는지 그 내력과 더불어, 오랜 전쟁의 참화로 온갖 생활조건이 파괴되어 가는 그 지역에 근년에 닥쳐온 가장 심각한 재난, 즉 물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그가 우물을 파는 의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얘기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의 테러에 뒤이어 미국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나카무라는 아프가니스탄의 실정을 알리기 위해 급히 일본으로 돌아와 각지를 돌며 강연을 행하였는데, 그 강연 중에 그는 아프가니스탄의 시골 마을은 아무리 전쟁의 참화로 파괴되어 왔어도, 그 나름으로 공동체적 토대 위에서 자립적으로 살아올 수 있었는데, 그 자립의 원리는 마을마다 불문율로 갖고 있는 오래된 두 가지 관습, 즉 “환대법”과 “복수법”이라는 점에 대해 주

의를 환기하였다.

“복수”라는 것은 이슬람의 전통에 따른 정의의 실현방식을 말한다. 상대방이 내 이빨을 하나 뽑아갔다면, 그에 정확히 상응하는 보복, 즉 나도 상대방의 이빨 하나만을 뽑아와야지 그 이상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전통에서 말하는 “복수”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무역센터에서 수천명의 미국인이 희생되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아프가니스탄, 이어서 이라크,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무고한 인명과 땅을 파괴하고, 위협을 계속하는 미국식 “복수법”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실로 문명화된 방식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관습이다. 나 카무라가 볼 때, 이러한 관습이 낯선 사람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환대법”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민중사회가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살만한 사회로서 존속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이였다.

실은 아프가니스탄 마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모든 문화, 모든 사회적 집단이 자기 자기 나름으로 타자를 환대하는 방식을 갖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서구 세계에서 환대의 방식은 비서구 세계에서 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왔고, 그 결과 오늘날에는 호스피탈, 호스피스 등 명칭에 그 자취가 남아 있을 뿐 환대의 실질적 내용은 사라져버렸다. 이러한 견해는 이반 일리치에 의해서 주로 개진되어왔는데, 그는 <환대와 고통>(1987)이라는 에세이에서, 역사적 경과에 따라 서구 근대사회에서 “환대”의 관습이 사실상 사라져버린 현상을 한 가톨릭 순례자의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작고한 추기경 장 다니엘루가 들려준 경험은 이러한 복잡한 역사적 진실을 간단히 전달해주고 있다. 그의 중국인 친구 한 사람이, 기독교도가 된 다음에, 북경에서 로마까지 걸어서 순례를 행하였다. 중앙아시아에서 그는 규칙적으로 환대에 접했다. 슬라브 국가들 속으로 들어가서는 그는 이따금 누군가의 집으로 초대되었다. 그러나, 그가 서방교회 지역에 도착한 뒤에는 그는 구빈원에서 잠자리와 먹을 것을 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왜냐하면 각 가정의 문들은 낯선 이들과 순례자들에게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환대”에 관련하여, 동양과 서양이 보여주는 차이는 오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일리치는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낳은 서양세계의 경험에서 그

는 기독교의 타락의 시작을 보고 있다. 일리치의 유명한 표현대로, “가장 좋은 것이 부패함으로써 가장 나쁜 것이 되어버린” 이 경험은 4세기에 고대 로마에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됨으로써 비롯되었다. 일리치에 의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분, 인종, 종파,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 표시하는 자발적 “환대”의 정신이었다. 그리하여, 지하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서도 초대 기독교인들의 가정에는 예외 없이 세 가지 물건이 늘 갖추어져 있었다. 양초 하나, 마른 빵 한 조각, 담요 한 장. 왜냐하면 밤중에 누구든 길을 가는 나그네가 대문을 두드리면 어느 때라도 그를 초대하여 자신의 집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도록 촛불로 안내하여, 준비된 빵으로 허기를 면하게 하고, 담요를 깔아 잠자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인 환대의 풍습은 로마의 국교로 된 기독교 교회가 가난한 사람, 집없는 사람, 떠돌이 행려 병자 등을 제도적으로 구제하는 기관들을 설치, 운영하기 시작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독교도들의 가정에서 나그네를 위한 양초와 빵과 담요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준비해두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일리치는 이러한 “환대의 제도화”에서 근대국가의 복지체제의 기원을 보고 있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의 전적인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던 타인에 대한 친절한 행위, 보살핌의 행동이 이처럼 공적인 기관 혹은 “전문가”의 일이 됨으로써, 적어도 서방 기독교 사회에서 인간은 타자에 대한 우애의 자발적 표현이라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좋은 자질을 기르는 기회로부터, 교회는 자기도 모르게 사실상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환대의 제도화”는 서구 근대국가의 발전과 그로 인한 제국주의적 팽창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이 심화, 확대되어왔다. 이미 공동체가 붕괴된 곳에서 사람들 사이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자발적인 친절과 보살핌의 행위가 순조롭게 유지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동체(communitas)가 본래 어원적으로 함께(com)라는 낱말과 선물(munus)이라는 낱말의 결합에서 온,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화폐경제가 삶의 온갖 국면을 지배하고 있는 근대사회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베푸는 배려와 보살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증여행위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

러나, 화폐가 아니라, 증여행위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화폐경제에서 증여경제로--이것은 아마도 평화의 문제를 논의하는 마당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평화로운 세계는 단지 총성이 멈춘다고 해서 보증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과 그들에 봉사하는 범지구적인 엘리트 계층이 향유하는 낭비적인 소비주의 문화의 확장을 위해서 다수의 풀뿌리 민중의 삶이 끝없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구조화된 "폭력의 경제학" 속에 갇혀있다. 어느모로 보나 오늘날 "북"의 부유한 계층이 "남"의 형제들을 희생시켜온 대가로 누리고 있는 삶의 방식은 범죄적인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러한 생활도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 혹은 희망의 가능성이 있는지 모른다. 세계인구의 5분의 1에 불과한 미국 사람들이 세계 전체 자원의 절반을 소모하고 있는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노력보다도, 그러한 생활 방식을 모방하고자 하는 열망이 팽배한 세계적인 현실을 생각하면, 장래는 실로 암담하다고 해야겠지만, 지구온난화를 비롯하여 어김없이 다가오는 생태적 재앙이라는 긴박한 현실 앞에서 지능이 높다는 인간이 언제까지 이 임박한 재앙을 못 본 척 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근원적인 해결은 풀뿌리 민중 공동체의 자기 회복 이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과학기술의 힘에 기대어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이다. 과학기술은 최선의 경우에 부분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과 같이 자본과 국가에 예속되어 있는 한 그것은 도리어 치명적인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 다국적 기업, 특히 생명공학 회사들은 유전공학의 힘을 빌어, 의료와 농업에서 비약적인 진보가 이룩될 수 있다고 미국정부를 위시하여 각국 정부의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선전하고 있지만, 이것이 비군사적인 수단에 의한 세계 전체의 사실상의 식민화를 꾀하는 기도라는 것은,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지금 특히 서유럽 국가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 식품을 온 세계의 농지와 식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생명공학 기업과 미국정부가 어떤 책략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이것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2002년 남부 아프리카에 식량부족 사태가 만연하였을 때, 미국은 처음에 유전자 조작 잉여 농산물을 아프리카 아이들의 점심 식사용 식량으로 강제적으로 먹이려고 시도하였다. 심지어 미국

은 유전자 조작 식품을 국제 긴급 구호 식품으로서 받아들여도록 적십자연맹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인 시도는 먹혀들지 않았다. 잠비아와 짐바브웨 정부는 유전자 조작 식품과 같은 의심스러운 식품으로 자기 국민을 먹이기보다는 차라리 굶어죽도록 내버려두겠다고 말하면서, 미국 쪽의 시도에 저항을 했다. 수단도 유전자 조작 식품을 원조식량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미국은 다른 방법을 찾았다. 미국 상원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미합중국의 지도력에 관한 법령(2003)"을 통과시켜,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전자 조작농산물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에이즈 치료약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들었다. (Devinder Sharma, "GM Foods: Towards An Apocalypse" ZNet, 2003년 7월 19일)

이제 미국정부는 세계 전역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먹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인류 역사에서 선례가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상업적 이윤과 극소수 기득권층의 권력욕망을 위하여 이처럼 치욕스럽게 봉사하는 도구로 둔갑해버린 것도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만약 아프리카나 그밖의 "개발도상국"들이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받아들인다면, 지역의 기후 풍토에 맞지도 않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 재배로, 또 WTO의 지적 재산권에 묶여있는 생명공학 회사들의 종자들을 매년 되풀이하여 사들이지 않을 수 없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세계의 광대한 지역에 걸친 토착농업은 그 날로 붕괴될 것 이란 것은 불을 보듯 훤히 일이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지만, 오늘날 제3세계의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 의한 식량원조, 그리고 나아가 "현대적" 농업기술과 그에 결부된 기계와 화학물질의 남용으로 인한 농경지의 훼손과 농촌 공동체의 와해, 소농의 몰락에 기인해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결국, 민중의 평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공동체의 보존과 회복이다. 농업은 아직도 세계의 절대다수 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일자리이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사실상의 기업식민지로 전락해가고 있는 오늘날, 자본과 국가와 "전문가"로 이루어진 막강한 지배세력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한 토대 중의 토대로서 독립 소농들의 존재는 갈수록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체페슨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자치, 자급, 자립적인 소농의 존재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존립에

필수적이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어, 생태적 위기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소농의 역할은 한결 더 중요해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농경은 오직 소농들이 번창하는 농촌 공동체의 활력이 보증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식민주의와 개발의 시대 동안에 이미 쇠퇴하기 시작한 소농은 지금 세계화의 논리가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세계 전역에서 급속도로 몰락하고 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의하여 날이 갈수록 비대화하고 있는 대농, 농기업, 생명공학 회사들의 지배 밑에서 광대한 농경지가 사막화하고, 오염되고, 죽어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우리가 이제라도 소농을 되살리려는 노력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땅에 뿌리박은 지혜로써 수천년의 세월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살아온 풀뿌리 민중 자신의 인간다운 삶의 회복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그들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풍요”를 구가해온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 역시 더는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지구는 모든 사람의 기본욕구를 위해서는 풍요로운 곳이지만, 비록 소수라도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곳이다.” 오늘날 에콜로지스트들 사이에 자주 인용되고 있는 간디의 이 말은, 되돌아보면, 생태적 위기라는 문제가 아직 어느 누구의 관심사로도 떠오르지 않았던 20세기 초의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시대를 앞지른 탁월한 선견지명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요컨대, 서구문명이 이룩해온 공업 중심의 물질적 번영이라는 것은 그 혜택이 인류의 극히 일부분에게 국한될 뿐이며, 그나마도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와 자연자원을 끊임없이 억압, 착취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된 것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간디는 누구보다도 먼저 명쾌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산업문명의 해독과 한계를 극복하자면, 다시 말하여, 모든 사람이 장기적인 지속성의 토대 위에서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고르게 가난한 사회”에 대한 비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진리를 간디는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르게 가난한 사회”는 어떤 형태로든 농업 중심의 순환적 생활방식에 토대를 둔 사회여야 한다는 것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척결해야 할 것은 세계의 “낙후된” 사회의 가난이 아니라, 세계의 “선진” 사회의 풍요로움이다. 이 점을 명확히 하는 것보다 지금 민중의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평화운동과 민족주의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I. 문제제기

6.15 정상회담 이래 지난 몇 년 동안은 우리 모두의 뇌리 속에 민족, 민족주의, 평화, 이 세 단어가 무수히도 교차하였던 시기였다. 6.15 정상회담은 금방 통일이라도 될 듯이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민족적 동질성과 이질성의 실체를 반추하도록 하였고, 부시 정부의 호전적 한반도정책과 북핵 위기, 뒤이은 아프간·이라크전쟁은 이 땅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평화’의 문제를 절실하게 고민하도록 하였다. 이런 현실은 지난 3년 여 사이에 평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병행하여 사회 일각에서 우리 사회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지향성을 문제삼는 논의가 떠오르고, 이른바 급진적 민주주의자의 여러 요구들이 도전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월드컵의 붉은 물결, 뒤이은 촛불시위의 대중적 확산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민족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추하게 만들었다. 그간 상당히 활성화된 평화운동도 이제 자신의 지향성, 목표 그리고 통일운동과의 관계를 성찰하기 시작하였다. 당연히 지난 몇 년 사이에 활발해진 민족주의 담론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평화운동도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

게 되었다.

이 글은 평화운동에 참여한 활동가로서 민족주의를 둘러싸고 평화운동이 경험해온 몇 가지 문제를 쟁점화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은 민족주의와 평화운동의 관계설정에 대한 성찰의 출발에 불과하며, 앞으로 평화운동의 지향성과 방법론을 둘러싼 논의의 출발점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II. 근대 민족주의/국가와 전쟁

근대 민족국가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생성사적인 발전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전쟁은 왕, 귀족 그리고 직업적인 전사의 몫이었다. 대다수의 인민은 이 왕들의 전쟁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 서민들은 “자신들의 국가”로서의 국가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왕은 서민으로부터 애국심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어떤 공공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이 시대의 병사들은 대체로 지불된, 직업적인 중장비 군대였고, 지배계급이 지닌 민족적 정체성을 공유하지도 않았다. 정치적 경계는 민족성에 근거해서 보다는 영토의 원칙에 따라 분할되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과 더불어 시작된 민족주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이전에 통용되던 국가이성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제 국가는 인민의지의 구현체로 간주되었다. 근대 민족주의의 인민주권론은 이제 조약에 기초한 모든 권리주장을 문제시하기 시작하였다. 민족정체성의 원리로부터 민족주의와 전쟁은 밀접히 유착되었다. 위대한 사상가들, 헤겔이나 피히테에게 전쟁은 자연스러운 것이자 국민국가 형성의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간주되었다. 이제 “전쟁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전쟁을 만들어낸다”는 찰스 틸리(Charles Tilly)의 언급은 자명한 진리가 되고 있다.¹⁾

1) Rodney Bruce Hall, War and Security, Alexander J. Motyl(ed.), Encyclopedia of

프랑스혁명 직후에 세워진 신생 공화국은 장교의 지위를 매매하던 관행을 제거하고, 승진을 위한 덕목을 정착시켰다. 이런 개선조치는 애국적인 젊은이들의 사병뿐 아니라 장교집단으로의 대거진입을 초래하였다. 프랑스공화국의 군대는 대체로 무장한 시민으로 구성되었고, 특히 사병 집단이 동일한 법적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 구성되면서, 전통적으로 장교집단과 사병집단 사이의 사회적 간극은 많이 좁혀졌다. 이는 일반사병들의 동기부여와 도덕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 더불어서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군대는 프랑스인으로 구성되고, 직업군인에 드는 비용이 감소되면서, 국가는 언제든지 국민징병을 통해서 군대를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애국적이고 충분히 동기유발이 된 강력한 군대가 근대 국민국가와 공존하게 되었다. 인민주권이 지니는 정당성 때문에 이제 보통 시민들도 목숨을 바쳐 민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내면화되게 되었다. 1차대전의 참호로 갔던 세대의 경우 이런 정서적인 의무감은 인구학적인 파국의 지경에 이를 정도의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다. 옥스퍼드 대학의 기숙사에서는 전쟁 초에 학생이 3110명이었던데 비해, 1918년에 이르면 이는 400명으로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도 열광적으로 전쟁터로 나아갔고, 이는 사회주의자들을 크게 낙담시켰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전 사회가 전쟁을 위해 동원되고, 전 국가경제가 전쟁기반을 조성하는 최초의 근대적인 민족주의 전쟁이었다. 독일의 장군 뤼덴도르프의 ‘전면전(total war)’ 개념은 바로 전 국민대중이 참여하는 민족주의 시대의 전쟁교리였다. 민족주의적 전면전은 바로 대중의 전쟁이자 물자의 전쟁이었다.²⁾

이 물자의 전쟁에서는 징집된 남성을 대신하여 여성들이 노동력으로 대거 동원되는데, 영국의 경우 1차대전 동안 여성은 탄약공장 노동력의 60%를 공급하는데, 1917년 미국의 전시산업에서 여성 노동력의 상징으로 부각된 ‘로지 리베타 선전’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주의 국가사이의 전면전에서는 전투병과 민간인간의 차별이 흐려지는 것과 병행하여, 적의 악마화가 진행된다. 동시에 자국 내의 반대자에 대한 비판도 강화된다. 이렇게 근대 국민국가는 생성 초기부터 전쟁과 연루되면서, 전체사회를 전쟁의 주체로 만들어간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대

Nationalism, Vol. 1, San Diego: academic Press, 2001, pp. 873

2) Ibid., p. 874

로 민족자결주의라는 이 고상한 원칙이 전쟁으로의 진입을 합리화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민족국가의 전쟁 지향적 성향이 프랑스와 같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개방형의 서구 민족주의 국가가 아니라, 문화적 민족주의나 혈통 혹은 낭만주의적 전통이 강조되는 중·동부 유럽의 민족주의 국가에 이르면,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 이는 독일에서 드러나는 군국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 혹은 나치 치하의 대량학살 사건에서 민족주의의 극단적인 발전을 보게 된다.

확실히 프랑스혁명 이후의 근대 국민국가가 표방하는 인민주권론은 신분적인 특권에 제약받던 봉건사회를 자유로운 민족공동체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민족/국민 담론은 결국 “개별화된 시민사회의 구성원을 국민으로 ‘호명’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담론화 전략”으로 작동하였고, 이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여 자율적으로 국가의 규칙과 통제에 따르는 국민적 주체를 생산”하였다.³⁾ 이렇게 내면화된 규율과 가치를 통해 합의와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면서, 근대 국민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쟁의 불가피성을 내면화시켰다. 종합하여 결론짓자면, 근대 민족주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서구에 한해서 민족주의는 대내적으로는 비교적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하였으나, 동시에 전쟁에 전 국민의 전면적 개입을 위한 통로를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평화와 관련하여 근대국가는 분명히 딜레마를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한 국가 내에 충만한 평화가 국가 간 체제에서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안보와 관련하여 국가의 이익이나 세력균형은 항상 국가의 힘을 규정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작용해 온 것도 사실이고, 국제적인 평화를 유지하는데 항상 국가적 결속은 걸림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⁴⁾

서구에서 출발한 근대 민족국가는 평화를 유지하는데는 많은 약점을 지닌 제도로 출발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자유와 평화의 확장에 일견 기여하였더라도, 국가 간에는 전쟁을 감소시키기보다는 국민 전체를 전쟁에 몰입하도록 하였다. 국가나 발전

3) 임지현, 다시,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창작과 비평』 2002년 가을, 189면

4) Johan Galtung, 강종일 외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23면

단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근대국가의 속성은 세계 각국에서 그리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근대 민족주의의 형성과정을 전제하면서, 우리는 한국적 민족주의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화운동의 과제에 접근해야 한다.

III. 한국적 민족주의와 평화운동

“성조기 훼손과 'Fucking USA'라는 구호는 그 집회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이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와 미국 자체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반미'의 구호와 이어지는데, 이것의 문제점은 개인을 국가로 환원시켜버림으로써 모든 개인을 가해자이거나 피해자로 만들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내의 여러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리며, 사회적 약자들간의 국제연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해버릴 수 있습니다. 성조기를 미국패권주의의 상징으로 만들면서 태극기를 진보적 운동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은 같은 국기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입니다. 또한 '미국에 반대하는 한국'이라는 등식을 만듦으로써 전쟁에 반대하는 여러 목소리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며,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침묵하게 합니다. 즉, 전쟁이라는 것이 일상적, 구조적 군사주의를 통해 가능해지며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일상적 차별 및 폭력과 이어져 있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식의 '반전주장'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미', 'Fucking USA'라는 구호만을 외치는 것은, 오히려 반전운동이 급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방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故 신효순, 심미선 씨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있었던 추모, 반미 집회에서 그녀들의 주검 사진은 故윤금이 씨의 사진과 나란히 전시되어 왔습니다. 범대위 관계자들은 피해자 시신 사진 사용이 초래하는 거둬되는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시민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충격적인 사진을 걸 수밖에 없었다.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투쟁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

장하고 있지만 그 사진들은 운몽의 효과를 위해 '이용' 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 아닙니다. 故윤금이 씨의 주검 사진은, 사진이 찍힌 각도 자체가 이미 주검이 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사진이 찍혔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개인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근본적인 폭력과 군사주의의 문제를 건드리려 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의 운동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

주검 사진 전시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강화합니다. 故 신효순, 심미선씨의 주검사진 옆에 故 윤금이씨 사진이 나란히 '선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힘없는 한국이 여성 이미지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신체가 참혹하게 피해를 당한 장면이 (남성)민족의 치욕으로 치환되어 (남성)국가적 분노를 자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故 윤금이씨 살인 사건을 불평등한 국가 간의 문제로만 환원하는 것은 故 윤금이씨의 죽음을 반미운동에 '이용'하는 것이며, 그 죽음을 가능하게 한 여성에 대한 국가 내 남성의 지배와 폭력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은 미군과 한국 여성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존재하고 군사주의가 팽배한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 여성이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현 시기 진행 중인 전쟁을 반대하는 실천을 벌여나가는 것뿐 만 아니라, 그 전쟁의 근본원인인 군사주의와 남성지배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겠다고 충격적인 말과 영상을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폭력을 가하는 것이며 진정 전쟁을 반대한다면 모든 폭력에 반대하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하고자 합니다.⁵⁾

위의 글은 촛불시위와 반전시위에 드러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남성주의를 반대하는 젊은 여성주의자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평화운동과 민족주의를 바라보는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젊은 여성

5) 고려대 법대 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관악여성모임연대,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인권 없는 반여성적 반전운동 반대한다', 2003년 4월 7일 발표. 마찬가지로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유사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금이씨의 비참한 최후를 찍은 사건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주의자들은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 미군의 횡포와 자의적인 폭력에 저항하여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우리 사회가 지닌 일상 속의 군사주의나 가부장제에 반대하여 적극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소수 여성들의 항의가 우리가 겪어온 역사적 경험이나 운동사적 맥락을 되돌아 볼 때 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한국의 민족주의 담론을 비판하는 논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젊은 세대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논자는 권혁범과 임지현일 것이다. 권혁범은 식민지의 기억과 분단체제를 살고 있는 한국인에게 국가나 민족에 대한 열망은 대단히 강하고, 이런 국가에 대한 강박적 인식은 '근대적 개인'의 출현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군부독재와 더불어 국가 이데올로기의 각인과정은 폭력적이었고, 시민사회의 성장이 더딘 현실 속에서 이는 안보, 발전, 반공을 위해서 인권 침해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사고나 행동규범을 내면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서구보다는 물론이려니와 가까운 일본과 비교하여서도 한국의 20대는 '애국'과 '단결'로 상징화되는 강력한 국가의식을 지녔고, 전쟁에서의 희생을 감수할 의지가 더 강력하였다는 것이다.⁶⁾

이렇게 식민지경험-분단-신속한 근대화과정을 통해 각인된 민족주의의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가 달성된 이후에도 잔존하고 있어, 도처에 부국강병의 민족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족이 보다 강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고, 이 선진국 따라잡기나 강대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타자의 희생이나 우리 민족 내에서 일부 집단의 희생도 불가피하다는 신조를 암암리에 내면화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성장주의와 결합한 민족주의는 그 특유의 통합력으로 부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시킨다. 또한 성장주의는 자연의 파괴와 환경의 오염을 낳는데도 기여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민족주의는 적과 우리의 이분법 구도를 국민에게 내면화시키고, 강렬한 민족주의 감정이 생명, 자유, 평화, 평등, 환경 등의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대신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족담론은 다양한 구성원을 획

6)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의 의식에 대한 공동조사에서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우겠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주의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2000년, 솔, 서문 참조.

일적인 집단주의에 포획하고, 민족 구성원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나 갈등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전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요구는 우리 사회에서 성/계급/지역 간의 갈등과 불평등성에 대한 구조적 인식을 관심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서 민족이 당면하는 위기의 책임을 외부의 존재에게 돌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게을리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외부의 적을 향한 책임의 전가는 1997년 말의 경제위기 시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⁸⁾

그러기에 임지현은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외양 속에서 민족주의 담론이 지닌 권력의 지배 메카니즘을 발견한다. 근대 민족주의라는 해방의 코드 속에 내재된 배타성과 타자화의 논리를 보게되고, 바로 여기에서 배제되는 존재는 여성과 외국인 등 소수자였다는 것이다.⁹⁾ 민족과 민족주의가 지닌 담론이 지닌 이런 한계를 감안하자면, 민족과 민족주의 담론은 평화운동과 평화체제의 실현에도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앞에서 권혁범과 임지현이 지적한 민족주의의 문제점을 일일이 검토하자면, 우리는 이것이 직접적 폭력(물리적 폭행, 전쟁, 테러), 구조적 폭력(가난, 생태계파괴, 인종차별, 성차별, 핵문제), 잠재적 폭력(전통이나 문화조작 등)을 감소시키고 적극적 평화를 모색하려는 평화주의자의 근본 신념과는 배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임지현이나 권혁범의 비판은 주로 좌파 민족주의 세력을 향하고 있다.¹⁰⁾ 임지현은 프라카시의 말을 빌어, 맑스주의는 식민지 착취를

7) 같은 글. 그 외에도 권혁범, 근대성과 민족주의-단한 혹은 열린 민족주의를 넘어서, 동국대 대학원 신문, 2002년 12월 참조.

8) 권혁범, '시장/경제'승배시대의 민족주의와 세계화, 녹색평론 1998년 5-6월호 참조.

9) 임지현, 다시,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188면

10) 물론 권혁범은 촛불시위에 드러난 과도한 민족주의적, 정치적 대응방식을 비판하면서도, 촛불 시위의 '순수한 추모' 동기에 동조하되 시위가 변질되어 반미주의 성격을 띄는 것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그가 보기에 이들은 순수한 추모와 정치적 이용을 분리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내재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은 추모의 거룩한 행위로 위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권혁범, 촛불시위 '이야기'에 대한 몇 가지 생

폭로했지만, 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정전으로 삼는 도식성을 탈피하지 못하였음을 언급하고, 또한 그는 윌러스틴의 표현을 빌어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 담론이 사실상 '반유럽중심적 유럽중심주의'임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그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에 기초한 기존의 반체제운동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통해 변혁을 시도한 결과, 국민국가의 틀 안에 갇혀 거꾸로 국가간 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윌러스틴의 주장을 들어 좌파운동이 사실상 민족주의 담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¹¹⁾ 한국의 경우에도 진보적인 통일운동은 오랜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 민족과 민중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반공규율사회의 틈새'를 벌리는 존경할 만한 역사적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민중 중심적 통일 자주민주국가의 수립이라는 이념적 지향은 민족과 계급을 정점으로 하는 '정체성의 위계질서'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구도 안에서는 외국인-여성-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남성-정규직 노동자의 우위를 정당화하는 메카니즘을 만들어내고 있다. 임지현이 보기에 민족주의와 계급 담론은 분단체제의 효과로 환원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일상적 파시즘의 현실을 직시하고 극복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민중적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에 대한 통상적 이해아래 근대화 담론을 공유하면서, 권력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지현과 권혁범의 글을 접하면서 지울 수 없는 의문은 그들이 과연 민족주의를 배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로서의 민족문제나 민족주의는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미 앞서서도 짧게 언급한 대로, 양자는 모두 글 곳곳에서 민족주의 담론이 지닌 순기능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권혁범은 제국주의 지배에 저항하는 제3세계의 저항민족주의는 정당한 것이지만, 그에 대한 무성찰적 집착은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초국적자본이 전 세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국가의 수호' 혹은 '그것을 뒷받침할 경제적 자립적 근거로서의 일정한 민족주의는 필요약 혹은 차선'일 수도 있다고 고백한다. 결국 권혁범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보편적 가치체계를 수용하는 진보적 남성지식인들에게도 여전히 민족적 정체성이나 논리는 선차적 본질적 중심적"이라는 점이다.¹²⁾ 굳

각- '반미'금기의 위험, '반미'정당화의 위험, 『시민과 세계』 제3호, 2003년 상반기호.

11) 같은 글, 192면

이 말하자면, 촛불시위를 조직한 여중생 범대위가 무리하게 미대사관 앞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시민의 자발성을 과도하게 조직하여 그 성격을 '반미'나 '미군철폐'로 끌고 가려는 시도가 이런 예단을 가능하게 하였을 것이다. 임지현의 경우에도 "현존하는 국민국가의 존재를 세계사의 현실로 인식한다는 것과 세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지평이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¹³⁾

그렇다면 임지현과 권혁범이 말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우선 전자는 우리의 운동이 총체적 위계질서를 구축하려는 관념적 근본주의를 포기하고, "다양한 범주가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접합하는 복합적인 현실을 긴장된 시선으로 추적할 것을 요구한다. 남북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그는 "하나의 국민국가를 당위로 전제하는 통일보다는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체제를 지향하는 탈 분단으로 그 실천적 지향을 바꾸자"는 권혁범과 조한혜정의 제안에 공감을 표한다. 권혁범에게 근원적인 해결의 방향은 집단적 이익과 편견에서 벗어나서 '탈민족주의를 통한 전지구적 연대의 강화이며 발전주의의 포기'이다. 이 과정에서 민족정체성을 압도하며 등장하는 '새로운 중층적 다의적 주체'가 필수적이다.¹⁴⁾

지금에 이르기까지 권혁범과 임지현의 입장은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고립된 채 생활해왔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강대국의 공격이나 식민지 지배에 시달린 한국인이 지닐 수밖에 없었던 과도한 민족주의적 열정을 감히 비판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고, 이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토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우는 문제제기가 도달하는 결론이나 제시되는 대안이 수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이는 담론의 영역에서 벌리고 있는 이 논쟁이 과연 평화운동 혹은 다른 사회운동에서 그대로 수용될 수 있을가의 문제이다. 즉 민족주의

12) 권혁범, '시장/경제' 숭배시대의 민족주의와 세계화, 10면; 권혁범, 근대성과 민족주의, 3면

13) 임지현, 윗 글, 193면

14) 권혁범, 근대성과 민족주의, 3면;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주의에 대한 몇 가지 생각, 3면.

담론에 대한 그들의 비판이 다원주의에 대한 호소로 귀결되는 것을 보면서, 운동가는 맥이 빠져 버린다. 결국 평화운동이 존재하는 현실적, 운동적 조건 속에서 민족주의를 어떻게 대면해갈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로 남게 된다.

IV. 새로운 균형을 찾아서

이 땅에서 평화운동가로 일하는 사람들의 고뇌는 민족주의 정서가 유달리 강한 한국 사회에서 국민대중이 민족통일이나 민족문제에 대한 열정이 높는데 비해, 평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촛불 시위에 모인 대중과 이라크 반전운동에 모인 대중을 양적으로 비교한다면, 이런 경향성은 명백히 드러난다. 2002년 하반기 이후 활발하였던 촛불시위에는 몇 십만이 동원되었다면, 이라크 파병안 반대시위에는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3-4천 명 정도였다. 이는 수 십만 명 이상이 참여한 유럽에서의 반전 시위 열기와는 크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촛불시위에 대한 높은 관심은 미국의 오만한 태도에 대한 분노나 위협받고 있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려 등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이미 권혁범이 눈치 챈 대로, 민족주의적 정서가 그 열기를 고조시키는 데에 크게 작용하였음도 부인할 수 없다.

평화운동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일종의 유토피아이다. 평화운동가들은 이상주의를 향한 무모한 열정을 가진다.¹⁵⁾ 그래서 평화운동은 당장 전쟁과 비인간적 폭력

15) 이러한 이상주의는 평화교육의 방법론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평화교육이 지니는 차별성은 '현상유지와 여기에서 조금 나아간 개선'을 지향하는 것이기 보다는 '대안적인 미래'를 설정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현실사회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에 있다. 즉 " '현재에서 시작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방식과는 정반대로, 개인이 꿈꾸는 미래,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먼저 그려보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아내는, '미래에서 현재로' 단계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이다. 이는 피교육자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능력'과 그 '꿈을 이루어보겠다는 의지와 성실한 실천'을 가

이 사라진 사회를 회구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구조적 폭력, 잠재적 폭력이 사라진 사회를 희망한다. 이는 자본주의적 산업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들, 즉 고도성장, 자본의 독점, 군수산업의 확대, 업적주의와 효율우선주의, 환경파괴, 빈곤, 성차별, 인종차별이 사라진 사회를 꿈꾸는 일이다. 이는 평화운동이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넘어서는, 반자본주의적 과제를 안고 가야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평화운동이 당면한 아프간반전운동과 이라크반전운동, 국방예산감시운동, 무기구입 감시운동, 소파개정운동 등의 과제를 감당하는 것도 현재의 역량으로는 힘에 부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운동가를 괴롭히고 있는 큰 고민은 “우리 운동이 적극적인 평화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안사회를 모색하고 실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 노력은 아직 소홀하다”는 자책감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 연대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전쟁 반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파병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중요한 동기는 한미동맹관계의 균열에 대한 두려움 못지 않게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였다는 사실은 왜 평화운동이 대안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가를 일깨워준다. 이는 경제성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나 부국강병주의적 민족주의를 극복하지 않은 한,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결단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적인 자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평화운동의 성패는 대안사회, 대안경제의 모색과 직접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평화운동이 어찌면 현실 속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유토피아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이나, 평화는 대중에게 대단히 추상적인 미래로 다가오기 쉽다. 더구나 대중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가 아닐 경우, 국제평화나 타자의 평화에 대해 그 어떤 절박감을 갖기가 어렵다. 1968년 유럽 학생운동에서 진보적 지식인이 부르짖은 ‘제3세계의 해방’이라는 구호가 대중에게, 노동계급에게서 얼마나 냉담한 반응을 받았는가는 익히 알려진 일이다. 운동가에게는 그 원대한 꿈의 원칙을 확인

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기존의 교육학이나 교육제도가 지닌 속성을 뒤엎는 ‘역설의 교육’이 되고자 한다. 이는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현행의 학교나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평화, 인권, 새로운 미래를 위한 가치와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혁명적이기 때문이다. 고병헌, 실천적 평화교육을 위한 철학적 기초, <여성평화> 1집, 258, 260면

하는 것에 못지 않게 현실 속에서 평화운동의 작은 승리를 쌓아갈 것이 요구된다. 이는 대중운동의 동력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평화운동에 있어서 민족담론은 대단히 매력적인 유혹이다.

그간의 근대사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지향하였던 계급적 정체성은 사회적 자기 정체성의 기초로서의 민족주의적 집단 의식에 대적할 만한 대안이 되어본 적이 없었다. 1차 세계대전시 사회민주당의 노동계급이 보여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열광이 그 좋은 사례일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번번이 계급의식이 민족주의를 넘어설 수 없음을 절망하였다. 계급적 정체성 역시도 항상 민족적 배경에 놓여 있거나 민족문화에 포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¹⁶⁾ 이는 ‘인민주권’이나 ‘일반의지’ 혹은 ‘대의제’ 등이 ‘민족/국민을 내면화하는 담론적 기제’라면, 민족주의가 그 구성원에게 문화적 에토스 혹은 정서적 공감대를 제공하는 문화적 기제로 작동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민족주의는 근대사회의 탈기독교화 과정에서 종교적 정체성을 대신하는 새로운 시민종교(civil religion)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종교로서의 민족주의는 근대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고독한 개인의 정서적 공백을 메워 주면서 일상적 사고와 실천을 규정하는 일종의 생활양식으로까지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민족담론이 가지는 동원력과 호소력은 서구의 역사적 경험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여건 때문에 평화운동이 적어도 현실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족주의가 지닌 양면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현실 속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고민은 또한 세계평화를 논하기에 앞서 당장 한반도가 처한 위기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2002년 10월 켈리 특사의 평양 방문 이래로 야기된 북핵위기로 인한 상황의 급박성은 먼저 평화체제의 실현을 우리 민족 내부에서부터 달성해야 한다는 현실적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다. 당연히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평화로 연결된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압력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부의 양극화 혹은 신빈곤층의 급격한 증가현상이 일어나면서

16) Rodney Bruce Hall, op.cit., p. 882

사회는 극도로 불안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세계화로 인한 빈부격차 증대나 환경파괴로 인한 생존적 불안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민족주의나 민족담론은 여전히 전쟁 예방, 평화체제 실현 그리고 반세계화운동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처한 상황은 탈민족주의를 논할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아무리 하여도 민족문제를 벗어날 수 없고, 민족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한 민족주의 담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남은 문제는 어떻게 주어진 상황의 절박성 속에서 민족주의 담론을 활용하여 최대치의 평화를 만들어내느냐 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민족주의가 지닌 양면성이다. 타미르(Yael Tamir)는 민족국가의 성원은 집단에서 익명적인 존재, 망각되기 쉬운 존재일 수 있는 개인을 구성원의식을 통해 구원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민족적 귀속성을 통해 고독과 익명성, 소외를 벗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족국가와의 동일시는 국가의 경쟁을 통해 개인의 삶도 개선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전망을 열어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민족주의는 모든 개개 국민에게 평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월슨의 민족자결권 개념도 그것이 탄생 배경 자체가 미국의 식민지 헤게모니 장악과 연루되어 있지만, 국민 성원에게 자신은 국가 뿐 아니라 스스로의 삶의 '통치자'라는 인식을 통해 개개인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¹⁷⁾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공세 속에서 전 세계는 가난한 나라의 구석구석까지도 전지구적인 소비문화로의 평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소비문화 뿐 아니라 구래의 사회적 관계의 네트워크까지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여전히 민족주의적, 종족적, 종교적 혹은 여타의 반작용은 이런 전지구적인 단일화에 대한 저항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지나친 애국심이나 국수주의가 세계화시대의 우리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던가, '개방이 애국'이라는 구호에서부터 '세계화 시대에 우리 것을 팔기 위해서는 남의 것도 사야 한다'는 설득적인 논리에 이르기까지 민족주의를 공격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 이런 목소리들이란 대체로 자본의 이해관

17) Rodney Bruce Hall, op.cit., p. 880

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복리와는 배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권혁범 자신도 바로 이런 개방화의 압력에 맞서서 과도기적으로 국민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¹⁸⁾

또한 민족주의 담론의 대항자를 자임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이 양면성을 지녔음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시대는 민족국가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탈국가주의 시대가 아님은 분명하고, 오히려 세계체제의 변화가 국가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국가 기능을 둘러싼 대립과 분기가 일어나는 시점이다.¹⁹⁾ 여전히 한 개인의 운명은 그 국가의 성패에 좌우되고, 근대국가에 내장된 배타성과 타자화의 논리에 못지 않게,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체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도 국가의 가부장성은 많은 역사적 사례를 통하여 드러난 것이지만, 동시에 근대 국가의 부재가 얼마나 여성의 삶을 질곡으로 몰아 넣었는가에 대해서는 최근에 탈레반 치하의 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²⁰⁾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국가에 대한 태도도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지식인이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는 서구의 몇몇 선진국을 제외한 소국에서는 페미니즘과 민족주의의 결합이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²¹⁾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중요한 문제, 즉 경제적 재분배의 과제를 담당하는 것이 국가일 수밖에 없다면, 국가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사회민주주의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을 것이다.²²⁾

평화운동이 민족 범주와 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태도는 그것이 지닌 현실적인 역동

18) 권혁범, '시장/경제' 승배시대의 민족주의와 세계화, 6-8면

19) 유재건, 통일시대의 개혁과 진보, 『창작과 비평』 116, 2002 여름, 22-3면

20) Valentine M. Moghadam, Patriarchy, The Taleban, and politics of Public Space in Afghanista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Vol. 25, No.1, pp. 19-31 참조

21) 정현백, 『민족과 페미니즘』, 당대비평 2003, 30-3면

22) 김호기/권혁범, 기획대담: 질주하는 세계-세계화와 국민국가의 동학과 미래, 『교수신문』, 2001년 3월7일 참조

성을 끌어안되, 민족주의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전면내세우는 전략적 태도가 필요하다. 자연의 평화, 빈곤의 극복, 반핵, 성차별과 인종차별의 극복, 평화체제의 실현 등이 평화운동의 보다 핵심적인 가치로 떠올라야 할 것이다. 민족담론은 그 하위범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계급·민족·성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전개되는 근대세계의 다층적인 모순들을 균형있게 시야에 넣고 합리적 차원이 역사적 원급법을 담은 총체상”을 추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유재건의 제언에 근접하는 것이다.²³⁾ 그렇더라도 여전히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한반도 구성원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북한의 존재는 여전히 우리 몸 안의 곪은 상처와도 같은 현실에서, 반세계화운동이 여전히 지역차원에서 저항을 전개할 수밖에 없고, 동북아에서 지역차원의 저항이란 여전히 민족국가의 경계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민족주의가 가진 동력을 외면할 수도 없고, 결코 외면해서도 안 될 것이다. 특히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질곡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한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위해서도 ‘민족’담론은 도저히 거부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 담론과 관련하여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국가체제의 민주화를 내실화 하는 작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 전 서독 주민이 공유하였던 헌법애호주의(Verfassungspatriotismus)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월드컵 열풍이나 촛불시위에 드러난 젊은 세대나 네티즌의 존재는 일견 민족주의적 집단성에 의해 가동된 것처럼 보이나, 또 다른 국면에서는 이들은 기존의 강한 이념적 지향성을 지닌 80년대 세대와는 달리 자유롭고 휘발성이 강한 개체로 등단하여 미래의 발전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존재로 남아 있다. 따라서 평화운동은 그간 지향해온 인권, 적극적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와 새로운 민족주의 잠재세력 사이의 간극을 채우면서, 이 새로운 세대를 평화운동의 잠재세력으로 견인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탈민족주의 담론의 주장들이 제기하는 비판, 민족주의 담론이 지닌 배타성과 타자성, 소수자와 여성에 대한 차별 그리고 개인주의의 후퇴에 대한 비판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탈민족주의 담론이 지니는 문제점은 그들이 내세우는 대안, 생태주의와 개인주의의 결합, 새로운 중층적 다의

23) 유재건, 위의 글, 25면

적 주체의 복원과 같은 주장이 그간의 과도한 민족주의 담론을 비판하는데는 효과적이지만 그 자체가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²⁴⁾ 탈민족주의, 탈국가주의, 개인주의의 실현에 대한 주장은 자치 잘못하면 세계자본주의 체제와 결탁한 비민주적인 국가체제에 운동 자체가 무장해제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가 십상이다. 보다 소공동체를 단위로 하는 이런 지향성을 가진 운동들은 소집단의 국지적인 저항에 성공하였을지 모르나, 서구사회에서 평화운동이 하부문화(subculture)로 전락하는데 기여하였다. 오늘날 서구사회에서 ‘평화운동의 약화’와 더불어 ‘정교한 담론의 만개’는 바로 이런 현실의 냉소적인 반영이라 말할 수 있다.

탈민족주의 담론이 지니는 또 다른 위험은 자라나는 젊은 세대 사이에 탈민족주의에 대한 무성찰적인 수용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MD체제 구축, 북핵을 둘러싼 전쟁위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증대하는 신빈곤층의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박하게 싸워야 할 당면과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좀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접근과 투쟁이 필요하다.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과도한 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또 한 단계임은 분명하나, 지금 국면에서 탈민족주의 담론은 시기상조인 것이 분명하다. 여전히 서구와 비서구 사이에는 힘의 비대칭적 관계가 존재하고, 여전히 신식민주의적 지배체제에 대해서는 저항의 날을 세울 것이 요구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민족 담론은 일정 정도 유효성을 지니고 있다.

임지현이 한국의 진보적 운동권이 과도한 민족주의 담론으로 채색된 듯이 결론짓는 발언도 그리 정확하지 않다. 이미 진보적인 통일운동이나 평화운동 내에서도 과도한 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현실정치의 한 형태로서의 북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제기되고 있고, 그만큼 운동 내부도 다양해졌다. 그런 점에서 진보적인 통일운동 대 탈민족주의 담론과 같은 이분법의 설정은 그리 좋은 방법론은 아니다.

오히려 생태주의와 개인주의의 실현, 다중적 주체의 회복, 소수자와 여성을 살려내

24) 유재건, 위의 글, 24면 참조.

기 등과 같은 제안은 평화운동이 추추해야 할 궁극적인 대안이기는 오히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는 평화운동의 운동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데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군부독재에 저항하여온 집단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폭력적 방법을 재생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의 시민사회운동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이제는 평화운동도 어떤 평화적이면서도 감동적인 방식으로 대중을 설득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운동방법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해졌다. 촛불시위에서 성조기를 태우는 행위, 전경에게 퍼붓는 언어폭력과 몸싸움 등의 집회문화를 바꾸어 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평화는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못지 않게 평화운동 과정에서 평화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의 평화를 문제삼고, 우리 속에 모세혈관처럼 스며들어 있는 군사주의를 포착해내고, 평화문화를 실현하려는 캠페인은 바로 평화의 실현을 구조적인 접근에 못지 않게 내 안에서부터 발견해가려는 노력이어서 귀중한 의미가 있다.²⁵⁾

25) 이를 위하여 정현백, 김대중정부에서의 민간단체 여성평화통일운동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제 6회 평화통일포럼(2002. 11. 6) 자료집 참조.

교사들의 '평화교육' 만들기¹⁾

이장원 무학여고/전교조 통일위원회 사무국장

지금까지 한국 학교 교육에서 평화교육은 없었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2003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수많은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반전 평화교육을 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교사모임', '평화교육연구회' 등 몇몇 교사모임에 의해 평화교육과정이 연구 시도되긴 했지만 이는 몇몇 교사들의 연구 실천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2003년 봄 반전 평화교육은 그런 한계를 일거에 뛰어넘어 수천 이상의 교사들이 스스로 교육내용을 재구성 교육에 임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중요한 변화였다.

이런 점에서 2003년 봄 반전 평화교육은 한국 학교교육에서 평화교육이 교사들에 새로이 만들어지고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준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할 만하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2003년 봄 반전 평화교육에 대해 먼저 짚어보고, 그간 한국 교육에서 평화교육을 위한 새로운 노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원고는 서울 역삼중학교 정용민 선생님(도덕)의 도움으로 작성되었다. 정용민 선생님은 필자와 전교조 통일위원회, 화해평화통일교육전국모임을 함께 하고 있으며, 평화교육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다.

I. 2003년 반전 평화교육 대중화

1. 2003 이라크전쟁 - 대중적인 반전평화교육의 시작

지난 2월 15일,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세계적 평화의 연대를 통하여 어떠한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 전쟁을 막아내고자 100여 개 국가와 600여 개 도시에서 1천2백5십여 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전쟁반대를 외쳤다. 이 거대한 반전 운동은 사상 최대의 사건으로, 1970년대 미국에 쓰디쓴 패배를 안겨주었던 베트남 반전 운동도 이에 미치지 못했다²⁾.

한국에서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반전평화운동과 반전평화교육의 가능성이 새롭게 열렸다.

서구 평화운동보다는 뒤늦게 시작했지만, 이라크 파병안이 통과되는 날, 전지구적 규모의 반전운동에 협력하는 4-5천명이 시민 시위대가 형성되었고, 인간방패로 이라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상 초유로 정부의 이라크 파병안에 대한 정치인들의 반대가 공론화되었고, 방송 또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공론화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반전평화운동은 시민사회의 질적 변화를 예고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한겨레 5/15) 시민사회가 자신을 옥죄어 온 냉전의식과 배타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우리 민족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국민들 사이에 연대가 잘 일어나지 않았

2). 이런 세계적 반전평화운동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패권적 질서유지를 위한 전쟁은 예정대로 감행되었고, 전쟁이 쉽게 일단락 되자 반전 평화운동은 급속하게 냉각되어버렸다는 점에서 세계의 반전평화운동이 20세기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힘으로 작용할 지에 대하여는 좀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1968년 유럽의 '68혁명'이 베트남 반전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면서 '68혁명' 자체와 무관하게 서구사회의 가치관의 전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유추해볼 때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형성된 세계적 반전평화운동은, 그 지속 여부를 떠나, 21세기 세계사에서 인류의 가치관을 바꾸어내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는데 이번 평화운동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각 운동영역별로 끊임없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뿌리를 내려온 진보와 참여의 기운이 마침내 시민 사회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사회에서도 유사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전 '화해평화통일전국교사모임'에서는 '이라크 침공 반대, 교사 평화 선언문'을 조직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시급히 조직된 이 선언에 4일만에 전국에서 3800여명이 참가하였다. 몇몇 학교에서는 90%이상의 교사들이 참가하였다. 그 후 전교조 통일위원회에서 이 선언을 조직하였는데, 전국적으로 1만 5천명 이상의 교사들이 참가하였다.

이라크 전쟁 발발과 동시에 전교조 통일위원회는 '전쟁 반대', '평화 사랑'의 문구가 새겨진 반전평화 배지 달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반전평화 배지는 순식간에 33만 개가 학생들에게 나누어졌고, 전북 관촌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반전 배지만도 6만개가 배포되어 총 40여만 개의 반전평화배지가 학생들의 가슴에 달렸으니 짧은 기간 대단한 참여를 이끌어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반전 평화 배지 나누기는 거의 전적으로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주문되고 배포되었다³⁾.

반전평화 배지 달기와 함께 교사들이 반전평화 수업이 진행되었다. 교사들의 반전 평화 수업은 반전평화 배지 달기와 마찬가지로 현장 교사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 때문에 얼마의 교사들이 얼마만큼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였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나, 최소한 반전평화버튼을 받은 학생들 수를 훨씬 상회하는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든 반전평화교육을 받았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⁴⁾.

3). 당시 전교조는 조직적으로 네이스 투쟁에 힘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조직적인 힘을 실지는 못하였다. 때문에 36만개의 반전평화 배지 주문은 전교조의 조직적 결의에 의한 배포가 아니라, 거의 일선교사들의 자발적인 주문과 배포를 통해 이루어졌다. 때문에 36만개라는 수가 갖는 의미가 각별한 것이다. 자발적인 반전평화 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회에서 반전 평화 배지를 주문하여 학생들에게 판매하고, 수익금을 이라크 어린이 돕기 성금으로 내기도 하였다.

4). 2003년 봄, 전교조의 반전평화교육에 대해 보수수구세력은 전교조 홈페이지의 공동

전교조 통일위원회는 6월에 들어 6.13 여중생 1주기와 6.15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기념하여 자주평화화해교육주간을 설정하고, 6월 15일을 '화해의 날'로 선포하면서 '화해·평화 사랑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화해사탕과 평화사탕을 주문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면서, 화해와 평화의 의미를 해설하고, 학생들에게 화해사탕을 갈등관계에 있는 타인에게 건네면서 평화사탕을 함께 먹게 하는 소박한 교육활동이었다. 물론 좀더 심화된 평화화해수업도 가능하게 수업자료도 제공하였다.

화해평화사탕은 전국적으로 56만개가 주문 배포되었다. 이 화해평화사탕 나누기 운동 역시 전교조의 조직적 힘에 의하기보다는 일선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다.

2. 2003 반전평화교육 성과

1) 대중적인 반전 평화교육 '운동의 가능성' 확인

2003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진 '이라크 침공 반대 교사 평화선언', '전쟁반대, 평화 사랑 배지 달기 운동', '화해·평화 사랑 나누기 운동'과 그에 병행된 반전 평화수업의 가장 큰 성과는 반전 평화교육이 대중적인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일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3가지 운동은 전교조의 조직적 결의에 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일선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음에도 수십만의 학생들

수업자료를 왜곡하여 반미교육이라 호도하며, 반전평화 교육의 확산을 저지하려 하였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전교조의 공동수업자료를 이용하기보다 인터넷 상의 영상자료, 신문, 방송자료를 활용하거나 자발적 토론을 조직하는 방식을 통해 반전평화수업에 참여하였다.

전교조의 반전평화수업자료는 공식적으로는 300여명이 다운받은 데에 불과하다. 전교조가 만든 반전비디오 수업자료는 1300여개가 배포되었다.

이런 점에서 2003년 반전평화교육은 일선 교사들이 전교조의 자료에 의존하는 그간의 형태를 벗어나 스스로 교육내용을 구성하며 참여하였다는 데서도 중요한 변화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을 참여하게 하는 성과를 낳았다. 전교조의 조직적 결의에 의해 추진되었다면 그 참여자수는 10여배 이상 높아졌을 것이다. 이는 반전 평화의 문제가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낯설지 않은 자신의 문제로 와 닿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한국 사회에서 반전 평화교육이 일반화될 수 있는 대중적 정서가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을 확인한 것이 2003년 반전평화교육이 갖는 가장 중요한 운동적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반전 평화교육이 대중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은 무엇보다도 청소년 학생의 정서가 변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냉전적 사고에서 급속히 벗어나기 시작하던 학생들은 2002년 여중생 사망 사건을 통하여 미국에 대한 맹목적이고 사대주의적인 '편견'을 녹여내기 시작하였고 인터넷 광장을 통하여 미국을 다시 보기 시작함으로써 예전 세대와 다른 비판적 의식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학교에서 여론 조사를 해보면 학생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 여중생 사건에 대해 '분노'를,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학생들의 변화는 반전 평화교육이 학교에서 널리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는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예전 같으면 의식 있는 교사의 반전 평화교육이 일방적인 메아리로 그쳤겠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반전 평화교육은 학생들에게 호응을 가져오는 의미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고, 이는 머뭇거리는 교사들에게 반전 평화교육에 나설 수 있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면에서 청소년의 이러한 변화는 반전 평화교육 대중화의 토대를 형성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반전 평화교육의 대중화 가능성은, 우리 사회에서 평화운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에 병행하여 평화교육에 담론의 연구와 확산, 평화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평화교육 측면에서 학생들의 변화가 학습자가 평화교육을 수용할 조건이 구비되어가고 있는 것이라면, 평화교육 담론과 연구 실천의 발전은 평화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적 조건이 마련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수년 전 평화교육의 담론과 방법론 연구가 담론 학자적 수준의 이론적 소개, 초보적 방법론 연구 수준이었다면, 2003년에 들어서는 현장교사들이 반전평화 교육의